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0. 1

국토교통부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핵심정책 위주의 성과관리 강화

- 성과관리과제 구성체계를 과단위 개별과제에서 정책관급 단위로 통합·개편하여 핵심정책 위주의 관리과제 수립 및 정책 성과 제고
- 과제체계 개편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도 개편하고 소위별 평가위원 수 확대(소위별 6~8인) 등을 통해 자체평가 내실화 도모
- * '18년 성과관리과제 92개(325개 성과지표), 7개 평가소위(소위별 3~4인)
→ '19년 성과관리과제 46개 과제(178개 성과지표), 3개 평가소위(소위별 6~8인)

□ 국민체감도 반영 확대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관리계획 상 모든 관리과제(46개)에 대해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반영(10점)
- * '18년 자체평가시 일부과제(33%)에 대해서만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 일반국민 등 대상(1,000명) 과제별 정책만족도 조사로 정책효과 측정

□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유도

- 상반기 평가('19.6)에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대표성을 갖춘 결과성격의 성과지표 설정 유도
- 자체평가위원·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성과지표 개선 검토 여부, 사회적 가치실현 성과지표 가점 고려 등 세부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평가 반영
- * 전략목표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 우수과제에 대한 가점 기준 신설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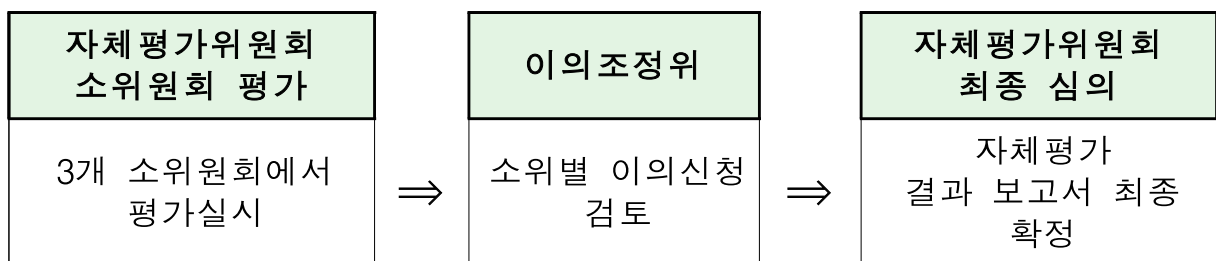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3개 소위원회, 23명)
 - 각 소위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이의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소위별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조정**

□ 평가방법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인 평가 실시
 - 과제 난이도 평가('19.5~6)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19.7) → 과제 이행 노력도 및 과제 목표 달성도 평가('19.12~'20.1)
- 평가 주기별로 담당부서의 설명 및 질의·응답 등 대면으로 진행하고 평가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설명자료는 평가위원들에게 사전 송부
- 평가 종료 후에는 과제담당부서의 평가항목별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조정위**(각 소위원장 등)에서 **최종적으로 조정**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결과를 심의·확정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1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총 46개 과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비고
과제 난이도	○ 계획수립의 적절성	· 정량화·결과성격의 대표성을 가진 성과지표 발굴 정도 (내외부 참여 검토회의 여부)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반영 여부 (추진계획 및 지표 반영 여부) · 사회적가치 실현 지표 가점	
	○ 성과지표의 난이도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이해관계자 의견대립 정도 · 과제내용의 신규추진여부	
과제이행 노력도	○ 계획이행의 충실성	· 계획의 기한내 완료여부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여건·상황변화에 대응정도 · 적극대응으로 문제해결 여부	
과제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 정책효과 발생 정도	· 정책효과 발생 정도 · 성과에 대한 여론 반응정도	
	○ 정책만족도	· 과제에 대한 대국민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2. 평가결과

(1) 총 평

□ 총 27개 정책관급(114개 과) 中 25개 정책관(108개 과)의 4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2개(5%), 우수 7개(15%), 다소 우수 9개(20%), 보통 14개(30%), 다소 미흡 7개(15%), 미흡 5개(10%), 부진 2개(5%)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관련 부서 수* (BSC 단위부서)	본부 107개 과	본부 102개 과	본부 25개 정책관급 (108개 과)
과제 개수	100개	92개	46개
지표 개수	356개	325개	178개
성과지표 목표치 평균 달성률	95% (16개 지표 미달성)	96.62% (11개 지표 미달성)	92.13% (14개 지표 미달성)
평균 점수(과제)	92.41	92.73	90.06
최대값-최소값(과제)	14.72	12.00	10.32
표준편차	3.08	2.99	2.87

* '19년도부터 성과관리과제체계 전환(과단위→정책관급 단위)으로 과제 수 감소

- 우수 이상 과제는 철도망 확충 및 철도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및 교통안전 강화,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의 체감 확산, 교통비 절감·광역버스 확대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이며,
- 미흡 이하 과제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국민생활안전행정을 위한 지하 및 실내 공간정보 구축활용 등으로 평가됨

□ 총 46개의 관리과제의 178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2.13%로

- 16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지연, 정책환경 변화로 인한 목표치 미달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법령 개정 목표인 경우 법안 국회제출 실적 등 지표의 부분 달성에 대해서는 달성 비율에 따라 등급화하여 산정(50~90%)

(2) 주요성과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및交通安全 강화, 철도망 확충 및 철도서비스 개선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확산 등 9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1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18.5)」에 따라 창업공간 조성(131개), 신규 일자리 창출(10,989개), 교육·훈련생 양성(14,789명), 「로드맵 2.0」 발표(‘19.11)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개최* 및 부산 시범도시 착공(‘19.11), 수소경제 지원을 위한 충전소 확충(고속도로휴게소 8기 운영)
-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과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 232억원 수출계약 달성
- K-City 개방 확대(‘19.3), 레벨3 안전기준 마련(‘19.12), 스마트건설지원센터 확대(‘19.6), 드론특별법 제정(‘19.4)·실증도시(‘19.7, 2곳)·전용시험장(‘19.9, 3곳) 구축
- 284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총 800여개의 생활SOC사업 추진,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19.8, 3곳) 등 지역산업 혁신 추진

2 생활 속 안전 확보 및 근로여건 개선

- 경찰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4년만에 역대 최저수준으로 감축(‘19.11, 3,025명), 철도 사고·항공 안전장애 수도 감소*
- * (철도 사고) ‘18. 88건 → ‘19.10. 63건 / (항공 주요 안전장애) ‘18. 34건 → ‘19.12. 22건
-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19.1)」,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대책(‘19.7)」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 직접시공 확대(‘19.3), 등록기준 개편 및 임금직불제 의무화(공공공사, ‘19.6), 택시 사납금 폐지·월급제 도입(‘19.3),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19.12)

③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및 실소유자 중심 시장 관리

- 서울 청약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중('18. 94.4% → '19. 97.9%)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18. 16% → '19. 19%) 증가 등 실수요자 중심 시장 여건 조성
- 신혼희망타운(1만호), 기숙사형 청년주택(1천호), 고령자 복지주택(1.3천호) 등 차질없이 공급*, 주거급여 상한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 '19년 공적주택 공급목표(20.5만호) 달성 및 장기공공임대 재고 확충(159.8만호, 7.6%)
 - ** 서울(1인가구) '19. 月 23.3만원 → '20. 月 26.6만원 / '18.12. 94만가구 → '19.11 103만가구
- 무주택 서민 26만 가구에 주택자금 저리 융자 지원, 중간소음 사후 성능 확인제도('19.4)를 통해 주택의 품질개선 유도
- 서울 집값 32주 연속 하락('18.11~'19.6), 분양가상한제 지정('19.11)·관계기관 집중점검('19.10~1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19.12)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확정(3차, '19.5) 후 13곳(15만호)은 지구지정 완료, 공시가격 현실화('19.1~4), 「'20년 공시가격 및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19.12)

④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소기반 마련 및 교통 공공성 강화

- 광역교통 전담 조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설립('19.3), 중장기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 선포('19.10)
- GTX-B 예타 통과 및 신안산선 착공('19.8), 김포도시철도 개통('19.9), 고속도로 1개(2.5km)·국도 25개(189km) 노선 개통, M버스 확충
- 천안논산, 구리포천 통행료 인하*, 설·추석 통행료 면제, 대구부산, 서울춘천 인하 방안 마련,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확대('19.6)
 - * 천안논산(9,400원→4,900원, △48%, '19.12), 구리포천(3,800원→3,600원, △5%, '19.1)
- 공공형 버스 지원제도 도입, 공공형 택시 확대*, 휠체어버스 시범도입('19.10), 항공기 지연 감소 및 지방공항 국제선 확충
 - * (공공형 택시) '18.12. 123만명 → '19.11, 194만명

(3) 개선·보완 사항

◆ 국민생활·안전행정을 위한 지하 및 실내 공간정보 구축·활용,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7개 과제는 미흡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1 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 부족

○ 도시재생 뉴딜, 노후 산단 재생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체감도가 낮고, 빈집 문제 등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부족

○ 건설 투자 등의 감소에 따라 건설 경기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시장의 전반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

* 무역 분쟁,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해외수주 실적 저조('18, 321억불 → '19, 204억불)

2 혁신기술의 가시적 성과 미흡

○ 스마트시티, 자율차 등 혁신기술의 가시적 성과 부족, 공공분야에 활용되는 드론의 국산화율 저조(30%) 등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흡

3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지속

○ 각종 안전대책에도 붕괴, 화재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 증대

○ 항공기 전수점검(404대) 등 각종 안전대책 시행에도 고장·인적요인 안전장애 발생, 보잉 기체결함(MAX, NG) 등으로 국민 불안 가중

4 높아진 눈높이로 주거지원 보완 필요

○ 청년임대주택 부지 확보 애로,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지원 미비, 지자체 주거복지전달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상존

○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수도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인프라 부재 및 이에 따른 출·퇴근 불편에 대한 불만 제기

(4) 평가결과 종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결과
I. 더불어 잘사는 국토공간을 구현한다.		
1. 국토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하고 쇠퇴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① 미래 국토비전 마련 및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	우수
	② 혁신도시 시즌2 추진동력 강화 및 성과 가시화	보통
	③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본격화	보통
	④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해 지역 활력 및 안전 제고	미흡
2.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고 품격있는 생활공간을 실현한다.		
	① 기존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	보통
	②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하 및 실내 공간정보 구축·활용	부진
	③ 수소도시 조성 및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통한 친환경 도시공간 창출	다소 우수
	④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대비한 건축물 품질 향상	다소 미흡
II.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 관리한다.		
1.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① 공적주택 지속 공급 기반 마련	보통
	②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의 체감확산	우수
2.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수요자 맞춤형 주거 금융 지원	보통
	② 정비사업 투명성·공공성 제고 및 주택품질 향상	보통
	③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및 거래단계별 질서 확립	다소 우수
III.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① 교통비 절감, 광역버스 확대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우수
	②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미흡
	③ 교통 서비스 제고 및 공공성 강화	미흡
	④ 항공산업의 체질개선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우수

성과 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결과
2. 국가기간 교통망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① 빠르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국민에게로	다소 우수
	② 철도망 확충 및 철도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매우 우수
	③ 지역과 상생하는 신공항 건설 및 기존공항 확충	우수
	④ 안전한 공항환경 조성 및 차세대 정밀항행시스템 구축	다소 미흡
3.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		
	①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및 교통안전 강화	매우 우수
	② 리콜 등 자동차 안전 강화 및 사고피해 지원	보통
	③ 사고 취약구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다소 미흡
	④ 철도안전 체계개선을 통한 철도현장의 안전대책 이행력 제고	다소 우수
	⑤ 철도인프라 관리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통한 철도사고·장애 예방	보통
	⑥ 국민안심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보통
Ⅳ.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을 육성한다.		
1.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①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부진
	② 기존 운수산업 체질 개선 및 신산업 육성	보통
	③ 자동차 A/S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미흡
	④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항공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다소 미흡
	⑤ 한반도·유라시아 철도연계 준비 및 철도산업 해외진출 지원	다소 미흡
2. 생활공간 속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한다.		
	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다소 우수
	② 자율주행차 수용성 제고 및 완성형 산업생태계 구축	우수
	③ 드론 실증도시를 기반으로 드론활용 일상화 유도	보통
	④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산업 육성	다소 미흡

성과 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결과
V. 국토교통 산업의 상생·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1. 건설산업 문화를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① 지속성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산업으로 건설산업 혁신	우수
	② 해외수주시장의 전략적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보통
	③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다소 미흡
	④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시설점검·관리체계 구축	다소 우수
2. 물류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한다.		
	① 생활물류 육성·지원을 위한 물류산업 혁신방안 추진	보통
	② 미래를 대비한 물류 기술개발 확대 및 친환경·안전운송 추진	미흡
	③ 물류시장 내 불공정 관행 개선	다소 우수
3.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중심 국토교통행정을 구현한다.		
	① 안전과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다소 우수
	②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	다소 우수
	③ 온·오프라인 소통 확대로 대국민 정책 수용성 강화	보통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I-1-①

미래 국토비전 마련 및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미래국토비전)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향후 20년의 국토공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수립('19.12)
 - * 국민 참여단(170여명) 운영('18.11~19.4), 지역별공청회, 청년소통세미나('19.3) 등 공감대 형성
- (새만금) 수변도시사업 예타통과('19.5), 새만금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19.8), 통합계획 수립착수('19.9) 등 새만금 부지를 속도감 있게 조성
 - * 태양광사업(0.1GW 규모) 추진을 위해 SPC 설립('19.10) 및 장기임대용지 조성('19년 10만평),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19.4), 새만금산단의 국가산단 전환('19.8) 등 추진
- (행복도시) 행안부·과기부 이전 완료 및 신청사 건립('19.10, 설계완료),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유치 업무협약('19.2), NGO 업체에 토지공급('19.10)
 - * 행복청-충청권 지자체 공동 광역상생발전기획단 운영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19.4)
-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지역특화 국가산단(전주, 경남, 밀양)은 분양, 산단 지정 등 절차를 조기 완료('19.9)
 - * (세종, 오송, 충주)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19.9), (영주) 사업타당성검토 신청('19.11)
- (해안·내륙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 정책 추진을 위해 4개 부처(국토·해수·행안·문체부) '섬 관광 활성화 협약' 체결('19.2.19)
 - * 도서지역 내 폐교를 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 특례 마련('19.7)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새만금) 민간투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他특구 수준의 투자 활성화 방안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행복도시)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도시 간 기능분담, 토지이용 구상 및 광역 교통·시설 체계적 정비 등 광역도시계획간 연계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수립, 새만금·행복도시·국가산단 조성 등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로 발굴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국토에 대한 미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장기 종합계획으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협력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관심 유도 필요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국토종합계획 등 추진과정에서 국민참여단 운영, 청년소통 세미나 등을 활용한 의견 수렴 및 상황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중장기 계획 수립과 새만금, 행복도시, 국가산단 등 사업 추진의 효과는 지속 창출 예상
3-3. 정책만족도	93.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혁신도시 성과평가·환류) 지자체 등의 **종합발전계획 이행** 독려를 위해 우수사업을 선정, **기획비** 지원(광주·전남, 전북, 울산 각 1억원, '19.6.24)
- (발전재단 설립)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관련 예산·인력 확보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선도적으로 **강원혁신도시에 법인 설립허가**(‘19.11.12)
- (복합혁신센터 건립) 울산지역 등 8개소* 설계 착수(‘19.9), 그 중 5개소는 설계공모 시 미세먼지 차단 및 제로에너지 건축 요소 지침 반영
 - * (설계) 울산·경북·경남·전주·완주·강원·제주·충북 / (제로E) 울산·원주·경남·전주·충북
- (지역기업 우대) 지역기업이 이전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공사·물품·용역 등)시 **우대 방안**(우선계약·가점부여 등) **제도화**(혁신도시법 개정, '19.11.26)
- (지역인재 채용확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既이전한** 기관 등도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부과하도록 혁신도시법 개정(‘19.11.26)
 -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3~5월, 8회), 이전기관 **오픈캠퍼스 확대 운영** (20개 기관) 등을 통해 **‘19년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달성** 전망(‘19.上 26.5%)
- (대전·충청권 광역화) **既이전기관 소급법안 통과를 전제로 대전·충청권 광역화 합의를 이끌어 내고, 既이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 * 既이전기관 소급법안 공포(‘19.11.26), 기이전기관 최종협의(11.15), 입법예고(12.9)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현행 채용범위는 혁신도시 소재 광역시·도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적용범위 추가 확대 필요**
- (복합혁신센터) 복합혁신센터 건축물(H/W) 건립뿐만 아니라 준공 후 프로그램 운영(S/W) 측면에서의 주민 체감도 제고 방안 등 고려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성 있는 결과 성격의 성과지표 발굴 노력 우수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성과지표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대립 및 목표치 적극성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6.5%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일부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을 위해 既이전기관의 채용의무 부과(혁신도시법 개정), 대전·충청권 광역화 등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국회 등 적극적 협의·대응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지역인재 채용 의무 확대는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 혁신도시 전반의 정책효과 창출에는 지속 노력 필요
3-3. 정책만족도	87.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뉴딜선정·관리)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98곳을 지지체와 함께 선정하고 사업지 189곳의 재정집행 관리 등 강화, 조기 착·준공 유도
- (제도 개선) 활성화계획(안)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조기 사업 착수 유도 및 혁신지구·인정제도 도입('19.8.27, 법개정), 혁신지구 시범사업 선정(4개소)
 - * (지자체 규제 완화) 지자체 부지매입가격 유연화·선매입 허용 등('19.6~) 및 국비지원 결정되면 매칭 지방비 투자심사 생략 등 조기 사업 착수 유도
- (도시재생금융) 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융자와母子리츠 운영 가능 근거마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19.4/19.8)
- (빈집 정비 등)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방안 마련('19.8) 및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촉진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수립('19.5)
- (교육체계 강화) 주민·활동가 교육은 기초·광역단위 “도시재생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기획·시행하고, 중앙에서 교육비 및 컨설팅 지원
 - * 도시재생 청년혁신스타, 청년인턴제 등 전문가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연합 인간정주프로그램(유엔 해비타트)과 협력체계 마련(MOU, 7.22)
-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공모를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검토·선정하고 주민주도 창업·사업을 육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53개)
- (지역기반 거버넌스 모델 공유) 도시재생 거버넌스 토론회('19.8), 협치포럼('19.2~10월, 4회), 청년 해커톤(2회) 등 다양한 참여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
 - * 도시재생한마당 개최(10.24~26, 순천) 및 도시재생 Pop-Up 스토어 운영(12월, 천안)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국가 심의(도시재생특위)를 받은 경우 지자체(지방위) 심의를 면제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충실히 설정, 향후 정책 효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표 발굴 노력 필요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정책개선 및 사업 추진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3%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인정사업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 등 일부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사업 실행력 강화, 신규 정책 수요 발굴 및 현장 적용에 적극적 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조기사업화, 사업 착·준공 관리 등 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정책 효과 기대, 사업의 질적 관리 등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효과, 국민체감 수준에 대한 중간 점검 중요
3-3. 정책만족도	92.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선정('19.4.4, 11개), 관계부처-지자체 협약체결(6.27), 컨설팅단 구성(9.6) 및 운영지침 마련·고시(11.11)
- (지역개발·낙후지역 개선) 지자체 자율권한 강화 방향으로 공모사업 개편('19.2.18), 성장촉진지역 대상 공모를 통해 26개 지원사업 선정('19.6.27)
 - * 생활SOC 접근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장촉진지역 지정지표 개선('19.8.27)
- (캠퍼스혁신파크) 관계부처 MOU체결('19.4.24) 등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5.15) 및 선도사업을 선정('19.8, 3개)하고 각종 특례 등 산업법 개정('19.12)
-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계획(수도권정비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 심의 통과
- (노후산단)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제13차 일자리위원회, '19.11) 하고,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고시('19.6)
- (수해예방) 홍수가 우려되는 15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에서 직접 정비·관리하기 위한 국가하천 승격 완료('19.8.7. 고시완료, '20.1.1. 시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1차년으로 선정, 협약체결, 사전절차 이행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가시적 성과 미표출(실집행률 44%)
- (캠퍼스혁신파크) 부처협업 방안 등 구체적인 중장기 추진 전략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차년도('20년)부터는 실집행률 제고, 추진단 구성, 전문가 컨설팅 등 적극 성과 창출 필요
-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우선 착수했으나 중장기 발전전략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개발사업 공모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반영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정책효과를 고려할 때 체계적인 준비 필요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신규 거점사업 추진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기대,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 필요
3-3. 정책만족도	89.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체계적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노후건축물, 화재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
 - 건축물 점검방식 개선, 관리자 및 점검자의 책임 강화, 지자체 역할 확대 등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19.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성능보강사업을 최초 시행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재취약 건축물의 보강 의무화 규정 마련
 - *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 화재취약 요건을 가진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화재보강을 실시함으로써 대형 인명피해 사고 방지
 - 건축안전에 대한 정책강화 등을 위해 「건축안전 전담조직」 신설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신용카드 연계 등 사업모델을 다각화하고 지원도 확대('18 9천동→ '19 11천동)
 - 그린리모델링 사업 후 에너지 절약 효과(약30%) 분석 및 녹색건축 한마당('19.11) 등 지속 홍보를 통해 녹색건축 인지도 상승('13, 45%→'19, 72%)
- 공공주도의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수립('19.10)
 - 1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 수용 제도 도입, 도시재생 사업 인정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現 324곳) 정비 시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화재보강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민간참여 유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추진 과제를 반영한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발굴 노력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각종 건축물 안전사고 등 현안 이슈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 향후 노후 건축물 확대·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 중요
3-3. 정책만족도	95.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19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10개市*)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郡지역까지 확대 구축(~'23) 계획 수립

* 10개시 : 고양, 시흥, 광주, 오산, 의왕, 하남, 의정부, 파주, 구리, 군포 등

- (활용성 제고) 지하공간통합지도(공개제한)를 지자체에서도 민간에 제공하여 지하 굴착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 지하공간지도를 지자체가 민간에 제공·활용하기 위한 절차 개선*

* (기존)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 (개선)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및 해당 지자체

- (실내공간정보 구축)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경찰대에서 요청한 수서역 등 5개 역사*의 3D실내공간정보 구축

* 5개소, 165천㎡ : 수원역, 수서역, 용산역, 청량리역, 안양역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하공간정보 구축 예산확보 미흡에 따른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와 지하지도(3D)의 구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예산을 증액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 및 예산국회 증액 등 노력 경주

* (예산 만회 노력) '20년 본예산은 '19년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101억원 확보, 예산국회 증액을 위해 상임위에서 추가 541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예결위에서 541억 미반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실적, 지자체 연계활용 실적 등 정량지표 적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확대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자료 민간제공을 위한 절차 개선 등 노력, 중장기 계획에 따른 사업 지연 예방 등 내실화 중요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지하공간통합 구축 확대 등 활용건수 증가, 지하공간관리 중요성 대두에 따른 정책 체감도 향상 중요
3-3. 정책만족도	93.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소도시)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마련('19.10)하여 기본전략을 제시하고, 공모를 통해 시범도시 3곳 선정('19.12)
 - 도심지(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수소도시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19.3,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 여건이 우수하고, 친환경 도시 조성에 주력하는 UAE와의 기술협력 MOU 체결('19.2)
 - 수소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소경제 이행을 뒷받침 할 범부처 수소기술개발 로드맵 수립('19.10)
- (장기미집행 공원) '19.5월 관계부처 합동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방안」 발표, 실효 대상 중 80% 이상의 공원을 보존하는 방안 마련
 -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지원을 위해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50%→70%), 토지은행·LH 연계사업 등을 추진
 - * 우선관리지역은 올해 5월 130km² → 11월 217km²로 60% 이상 증가했고, 동 기간 '20년 지자체 재원투입예정액도 2.1조원 → 3.1조원으로 증가
 - 비우선관리지역 중 국공유지는 실효 유예하는 법률 개정 추진('19.11, 법사위 통과)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소도시) 시범도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수소를 사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집중 홍보를 추진하여 수용성 제고 필요
- (장기미집행공원)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현황·실적에 편차가 크므로 '20.7월 이전까지 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에 대비한 대책마련 등 대응 및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등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실효 대응방안 등은 정책효과에 기여, 수소도시 조성은 초기 단계로 정책효과 발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요
3-3. 정책만족도	89.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19.1월, 4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
 - 또한 국무총리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현장 방문(19.3)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범정부 협의체(19.5) 구성
- 지구단위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제로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 등 「제로 에너지건축 보급확산 방안」 발표(19.6)
 -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구리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선정하여 제로에너지 정책효과 극대화
- 창의적 건축물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스마트 건축정보 시스템* 구축 등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19.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 국토부-마포구-감정원 스마트 건축정보 개발 추진 MOU 체결(19.9)
 - 또한 성능인정제도, 건폐율 특례 등을 통해 창의적 건축물 조성기반을 마련하고,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허가·심의제도 전면 개편(19.11)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공공건축 개선정책이 민간으로 확대·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필요, 총괄건축가 활성화를 통해 공공건축 품질제고 유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해 공공건축 복합화,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사업절차 기준 마련 및 총괄 건축가 활동지원 사업 시행(20)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공공건축 품격 향상,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대응 우수, 공공건축의 질적 개선 정책이 민간 차원으로 확대·연계를 위한 정책 노력 중요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총괄건축가 확대 및 건축심의제도 개선으로 정책 효과 기대
3-3. 정책만족도	89.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도권 30만호 계획 확정) '18.9·12월 19만호 입지 발표에 이어 '19.5월 41곳에 11만호 입지 확정

* 경기도지사, 서울부시장 등 지자체와 함께 발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MOU 체결

- 신도시의 경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2곳에 5.8만호이며 창릉은 서울부터 1km 내, 대장은 서울연접 등 서울 접근성이 우수

- 중소규모는 26곳에 5.2만호로 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리

*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천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백호), 왕십리역 철도부지(3백호) 등

- (지구지정) 기존에 추진 확정된 지구(신혼·청년지원방안, '18.7) 및 신규 추진지구(수도권 30만호) 공공주택지구 지정(목표 13개, 달성 14개)

* (완료) 성남서현,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역세권, 남양주 왕숙1·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과천, (12월말 예정) 성남낙생, 안양매곡, 부천역곡

- (지구계획 추진) '18년 지구 지정한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수립 하여 주민 설명회, 각종 협의 등을 거쳐 8개 지구 지구계획 승인

* (완료) 부천괴안, 부천원종, 김포고촌2, (12월말 예정) 밀양부북, 창원태백, 창원명곡,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지조성 조기추진 필요) 공공주택지구의 부지조성공사가 지연 되어 주택공급 지연 또는 공공주택 입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 발생

- 공공주택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이후 부지조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성공사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 시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지구 지정 건수 등 정량적 성과지표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신규 택지 입지 확정·발표 등으로 통해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 교통체계 공급 등 정책 수요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공적 주택지속 공급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효과 기대, 분양 등 실질적 정책효과 발생을 위한 정책 노력 중요
3-3. 정책만족도	90.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19년 공적주택 20.5만호 공급 계획을 초과 달성 전망, 105.2만호 공급계획('18~'22)중 42.8만호 공급달성 전망
- 「신혼부부·청년」('18.7) 및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18.10)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① (청년) 일자리연계형, 대학인근 기숙사형 등 공적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② (신혼) 육아특화 설계 등이 반영된 공적임대주택 4.6만호 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15만호 부지확보 및 1만호 착공 등
- ③ (고령자) 고령자복지주택(1.3천호 선정, '19.4)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0.9만호 공급
- ④ (취약계층) 공적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보증금 인하·긴급지원, 아동빈곤가구 우선지원, 고령자 편의시설 지원, 낙후지역 생활인프라 보수)

- (전달체계 강화) 연구용역('19.5~, 국토연) 등을 통해 유형통합 모델 마련('19.9) 및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접근성 제고
 - *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등을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도 마련('19.2)
- (임차인보호강화) 임대등록 활성화 지속 추진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19.1)
 - * 등록임대주택 지속 증가('17, 98만호 → '18, 136.2만호 → '19.10, 147.9만호)
- (투명성확보·관리체계 구축) 등록임대 관리정보시스템(렌트홈)을 확대 개편하고, 등록임대 업무 전담팀 신설 및 지자체 담당인력 증원
 - * 임대사업자 의무이행 점검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범부처 등록임대 관리강화 T/F 운영('19.8~)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 미지급, 사각지대라는 지적 제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 맞춤형 시책 보완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의견 수렴 등 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공공·등록임대주택 지속 확대 공급으로 최저 수준 주거자 비율 감소 등 정책 체감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92.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주택시장 관리·동향 모니터링)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 실현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19.4)
 - *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방향 결정의 정책 지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수가구를 포함 주거실태조사(‘19.3)와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 실시
- (시장안정화 방안 마련) 분양가상한제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19.9, ‘19.10)
 - * 분양가 심사위원의 전문성·공정성과 심사위 투명성 강화, 분양가 심사의 적정성 검토요청 근거 마련, 건축트렌드·자재가격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 기준비용 개정
 - 일부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동 단위)으로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지정 실시(‘19.11)
- (임차인 보호 강화)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전국 확대(‘19.7.29)
 - 손쉽게 신청·가입이 가능한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출시(‘19.11)
- (주거금융 지원) 청신혼·청년 주거지원 방안(‘22년까지 40만호 지원, ‘18.7)에 맞춰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대폭 확대
 - 고시원 거주자 이주지원 대출(‘19.12),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 대출(‘19.10)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인터넷(9.30)·모바일(10.14) 신청 서비스(가금든든) 출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효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서민주거복지 정책 지원을 위해 표본 수를 확대하고, 조사방법을 보완하는 등 통계기반 고도화 필요
-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파악을 위한 임대인 정보제공 법제화, 임대인이 법인이 경우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허용 등 제도상의 한계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7.0%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입주자저축정보 수집관련 법 개정 등 일부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분양가 상한제 투명성·실효성 확보, 주거 금융지원 강화, 주택시장 관리 등을 위한 의견수렴 및 대응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98.5%	· 목표한 성과지표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입주자저축정보 수집관련 주택법 개정 등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맞춤형 주거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비 경감에 기여,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장관리 정책 지속 노력 중요
3-3. 정책만족도	85.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수주비리 처벌강화 및 정비업자의 영향력 제한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심의 등 대응

* 삼진 아웃제 도입 등('19.7 김철민 의원), 정비업자 승계 제한 등 개정안('19.9 임종성 의원)

- 공사비 검증 의무화,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 강화 등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19.4.23) 및 하위규정(시행령, 고시) 제·개정('19.6.18)

* 조합점검 범위·대상 확대 시행 및 지자체 자체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매뉴얼 마련·교육, 정비사업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19.9~12)

- (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정보제공 강화, 세입자 보호, 재개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발의('19.9, '19.10) 및 하위규정 개정('19.12)

* 집주인임대사업의 사업절차 및 임대인 의무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19.9.30)

- 재건축부담금은 '20년말 부과·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귀속분의 합리적인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마련('19.12)

- (공동주택 품질 제고) 입주자 사전방문 강화·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신설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마련('19.8, 국회 발의) 및 국회 심의 대응

- 하자판정기준 개편 및 관련제도 신설을 통한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추진(개정안 국회 발의, '19.7)

- 생활밀착형 하자(충간소음 등)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2회) 및 정부 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간·배포('19.11.20)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법안(3건)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20년 상반기 국회심의의 적극 대응 필요

* 삼진 아웃제 도입 등 불법행위 처벌강화('19.7 김철민 의원), 정비업자 승계 제한, 정보제공 강화 등('19.9 임종성 의원), 이주·보상관련 협의체 구성 등 개정안 국회 발의('19.10 윤관석 의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정비사업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및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6.0%	· 목표한 성과지표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 등 일부 제도개선 과제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건축물 자재 라돈 저감·관리 등은 국민체감 높을 것으로 기대, 제도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여 정비사업 투명성·공공성 강화 기대
3-3. 정책만족도	89.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고 현실화율과 서민 부담을 고려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대외 발표('19.1.24)
 - 유형·지역·가격대별 상대적 불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개선 및 대외 발표('19.2.13),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외 발표(4.30)
 - * 거래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
 -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 - 시세 간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시세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 최소화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거래 쏠 단계를 통합 연계·관리하는 RTMS 중심 연계방안 및 시장질서 확립방안 마련('19.12)
 - 30일 이상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하는 건분법 시행령 개정('19.10.8) 및 택지 관리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19.11.24)
 - 일부 집주인들의 매물에 대한 호가 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 조종 행위 등 교란행위 제재 관련 공인중개사법 개정('19.8.2)
 - * 거래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신고포상제 도입 관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9.17, 조응천 의원안)
 - 사명 변경, 업무 개편 등 종합적인 한국감정원 기능개편안 마련('19.7.30)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향후 공시가격 선정 시 시세 적정수준 반영과 함께 서민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를 지속 운영해 나갈 필요
- 행정력·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 조사, 일회적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체계로는 지속적인 실거래 조사에 어려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과제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5%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 등 일부과제 지연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및 오류 개선 등에 대한 적극 대응 및 갈등관리를 통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공시가격 현실화, 담합행위 제재 등을 통한 불형평성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 등 정책효과에 기여, 공시가격 관련 국민적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속 노력 중요
3-3. 정책만족도	88.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광역알뜰교통카드) '18년 대비 대상지역 및 지원규모 등을 확대하여, 전국 89개 시·군·구에서 총 2만명 규모로 시범사업 운영('19.6~12)
 - * 카드 할인액 4,406원을 포함, 1인당 월 평균 12,246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
 - 스마트폰 작동절차 간소화, 후불 교통카드 도입 등 불편사항 개선 및 보상을 상향, 미세먼지 정책과 연계한 편의 증진 및 활용성 확대
- (M버스 운행 확대) 노선 신설 타당성 평가, 관련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경기·인천 지역에 M버스 5개 노선 신설(목표 대비 166%)
 - 운행지역 확대(수도권→지방 대도시권), 정류소 추가 설치(최대 14개) 등 개선 (~'19.12) 및 신설된 M버스 7개 노선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선정('19.7~10월)
 - * 고양·남양주·김포지역 M버스 4개 노선신규 면허 발급 완료(5~10월) 및 경기·인천지역 6개 노선 운송 개시(3~10월) 및 고양·화성(동탄) 지역 3개 노선 15대 증차(1~12월)
-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개선) 개선대책 수립 대상 규모를 조정*하여 개발에 따른 적정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토록 시행령 개정안 마련('19.10.31)
 - * (현행) 100만㎡ 또는 인구 2만 이상 → (개정) 50만㎡ 또는 인구 1만 이상
 - 개선대책 지연으로 교통불편이 심각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법개정 추진)
- (광역교통위원회 구성·운영) 대광위 소관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광역교통의 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 발표('19.10.31)
 - * 현장점검(20여회), 전문가·지자체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반영('19.3~8)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앱 개선, 모바일 페이 등 사용성 개선 필요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해 「광역교통법」 개정 추진(윤관석 의원 발의, '19.10.22.)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광역알뜰카드 마일리지 적립액 등 결과·정량적 성과지표 발굴 노력 우수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광역교통 문제관련 지자체간 이해대립 조정·갈등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개선 등 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확대, M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100.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도시철도)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김포도시철도 개통('19.10.30) 및 광주광역시 효율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광주 2호선 착공('19.5)
- (광역철도) 대구 1호선 연장 안심-하양 광역철도 착공('19.5) 및 서울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착공('19.12)
 - * 계획단계부터 급행서비스 도입 검토 등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19.12)
- (광역도로) 광주송정-나주시계 개통('19.10), 계룡신도안-대정세종('19.9) 및 동김해-식만('19.10) 사업 착공, 조야-동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9.11)
- (혼잡도로) 삼화맨션-과정교차로 착공('19.1) 및 체계적인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용역 착수('19.9)
- (간선급행버스체계) S-BRT 개념 구체화, 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가이드 라인 마련('19.12) 및 지역 여건에 맞는 S-BRT 시범사업 선정·추진('19.12)
- (환승센터 확충)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광위 주도로 주요 환승 거점(청계산입구역, DMC역, 강일역, 서대구역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
 - * 공공기관의 시행자 참여, 관할구역 외 사업추진의 비용분담 근거 마련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조용천의원, '19.11)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자체 추진 사업인 수원-구로 BRT 착공*('19.12월) 및 강남권 광역 복합 환승센터 착공**('19.12월) 지연 발생
 - * 경찰서 및 지자체 심의·허가 지연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지연 발생
 - ** GTX 삼성역 계획을 반영한 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발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환승지점 시설 확충, 재원 분담 등 지자체간 이해관계 조율 필요
- 일반 광역철도, BRT, 광역버스 등 위계별 연계교통시스템 구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설정, 전략적 지표 발굴 노력 필요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8%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수원-구로 BRT 착공 등 일부과제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김포 도시 철도 개통 및 광주2호선 착공 등 주요 사업 지속 추진에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9.0%	· 목표한 성과지표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강남권 광역 복합 환승센터 착공 등 일부과제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환승센터 확충 및 운영체계 재편을 통해 환승거리 단축 등 편의 개선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97.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취약지역 개선) 공공형 버스 도입을 통해 적자 발생 노선 정리 및 소형버스 탄력배차·콜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지원(차량구입비·운영비 등)
 - *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공공형 택시 확대('19, 135개 시·군)
- (버스 공공성 강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공영차고지, 벽지노선 지원 등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 수립('19.5)
- (교통약자)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4개 노선 시범운행('19.10~'20.1) 및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19, 1,088대)하고 농어촌 등에 중형저상버스 도입 추진
 -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1·2급 → 중증) 및 법정운행대수 상향 조정('19.7), BF인증 의무화 대상·범위 등에 대한 기준 마련('19.12)
- (서비스 개선) 프리미엄 버스 노선·횟수 확대(39개 노선 274회, '19.3) 및 반반택시(7.11), 앱미터기(9.26, 임시허가),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11.27) 허용
- (교통비 절감) 시외·고속버스 정기·정액권(할인) 발행 근거 마련('19.3)
 - * 정액권 사용기간 확대(주말 포함, '19.4) 및 단거리 노선에 왕복사용 할인권 시범 시행('19.11~)
- (교통영향평가 내실화) 대형 쇼핑몰 등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유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19.11)
- (주차장 공급) 주차장을 포함한 생활 SOC 3개년 계획('20~'22) 수립('19.4.15) 및 주차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고도화 사업 추진 등 주차장법 개정('19.11.26)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교통약자) 장애등급제 개편사항('19.7) 반영 등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국가교통위원회 검토 및 심의절차 진행으로 다소 지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공형 택시 운영지역에 수요응답형 정산 시스템 보급 확대 및 내·외국인 관광특성 등을 고려한 고속버스 정액권종의 다양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7.5%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정 수립 등 일부 과제 지연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주거지 주차장 개선사업 실집행 개선 및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 확대, 교통영향평가 실효성 제고에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7.0%	· 목표한 성과지표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등 일부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 운행,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강화 등 정책효과에 기여, 교통영향평가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효과 발현을 위한 지속 노력 중요
3-3. 정책만족도	93.9%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항공산업 체질개선) 항공사 임원자격 강화, 운수권 배분제한 등 제도개선 추진('19.3, 항공사업법 개정안, 안호영의원 발의)
 -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지역공항 활성화 등 3개 신규항공사 면허발급('19.3.5)
- (항공산업 성장지원) 주요국과의 전략적 항공회담을 통해 既 확보한 운수권 배분(2회) 및 ICAN('19.12)에서 사이프러스 신설 등 신규시장 확대
 - * 높은 수요의 중국 노선 대폭 확대(주174회, 34개 노선), 30년 가까운 몽골 독점노선(대한항공 단일취항) 해소,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부산-창이) 개설 등
 - 81개 항공기업 등 제2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개최('19.9.5~6, 김포공항)
- (서비스 품질 제고) '18년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 조기 발표('19.6.28)
 - 호텔에서 수하물을 맡기는 빈손여행 시범서비스('19.3.28~5.31) 실시 및 김포공항에 생체인식 탑승수속을 탑승구까지 확대('19.10.31, 시범운영)
 - 항공마일리지 사용처 및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 확대(5% 이상 배정, '19.1), 탑승편의 제공 등 교통약자 항공이용 편의기준 마련('19.8)
 - 항공기 지연율 집계기준을 국제통용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60분 → 15분)하기 위해 연구용역('19.6~12) 및 민관 TF팀 운영(매월) 등 추진
- 항공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마련('19.12) 및 지지교섭 활동을 통해 '19년 ICAO 이사국 7연임 달성(역대 최고득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항공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항공사 임원자격 강화, 운수권 배분제한 등)이 과잉규제 우려 및 업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교통소위) 계류 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항공분야 일자리관련 결과성격의 정략적 성과지표 발굴 노력 우수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을 통한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마련 및 한국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방안 합의 도출에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3.9%	· 목표한 성과지표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항공사 일자리 증가 실적 등 일부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한중 노선 운수권 확대, 신규항공사 면허 발급, 소비자 편익 제공 확대 등 항공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 ICAO 이사국 7연임 달성 등 정책효과도 발생
3-3. 정책만족도	90.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간선도로망 확충)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착수, 수도권 1·2순환망 연결 추진, 고속도로 1개(2.5km) · 국도 24개 구간(189km) 개통 등 간선망 확충
- (고속도로 접근성 제고) 경부선 북구미 등 하이패스 IC 4개소* 신규 착공('19.8) 및 중부내륙선 충주(휴) 하이패스IC 1개소 신규 개통(12월末)
 - * (대상) 경부선 북구미, 울산선 범서, 광주대구 서함양, 서해안선 영광(휴)
- (편리한 도로시설 구축)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맞춤형 휴게 시설 개설(10개소), 고속도로 쉼터공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 고속도로 휴게소(34개소)와 졸음쉼터(214개소) 총 248곳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추가
- 수소충전소 '18년도 구축분 8기 개장 완료 및 '19년도 구축분 10기에 대한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19.12)
- (도로 R&D) 미래사회 변화대응을 위한 도로 기술개발 전략안 수립(10.18)
- (민자 고속도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발족('19.1, 교통연) 및 민자 도로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19.1)하고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19.5.2~6.7)
 - 구리-포천('19.1), 천안-논산('19.12)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 (구리-포천) 3,600원(5.3% 인하), (천안-논산) 4,900원(47.9% 인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재 하이패스 IC 설치재원은 도공과 지자체 매칭(50:50)으로 시행 되고 있어 도공, 지자체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 지원 검토 필요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사업은 재정당국과 적극협의하여 구축비 지원 상향 검토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유도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지시사항,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정량적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8.8%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도로R&D 로드맵 수립 등 일부 과제 지연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통행료 인하를 위해 유료 도로법 개정 등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주요간선망 지속 확충, 하이패스IC 확충,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통행료 절감 효과
3-3. 정책만족도	98.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간선망 확충) 호남고속철(광주송정~고막원) 개량 완료('19.4),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19.7), 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개통('19.12)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1)」를 통해 선정된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개 철도사업* 기본계획 착수('19.11)
 - * 평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산업선, 충북선 고속화
- (수도권 광역망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본격추진* 및 신안산선 착공('19.8), 경부선 급행열차 운행확대(12.30) 등 광역철도망 확충
 - * (A노선) 금융약정 및 도급계약 체결('19.3), (B노선) 예타통과('19.8), (C노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19.6)
- (철도서비스 개선) 예매 취소 수수료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N카드 등 정기관·할인상품 신규개발·확대, 병합승차권 도입
 - * 동일 날짜·구간 예약 1회 무료 변경('19.6), 출발 후에도 모바일 반환 개선('19.7)
 - 무료 Wi-Fi 설치 등 역사 편의시설을 확충('19.12)하고, 공공형택시 운행역사 확대(9대) 및 카셰어링 전용면 확대(10개)
- (철도역사의 다양한 활용) 국가귀속 민자역사(舊 서울역, 영등포역) 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19.6)하고,
 - 철도시설 유휴부지를 어린이집(평내호평), 창업공간(안산 Station-G 등) 등 공공성 높은 시설로 활용하여 이용객 편의향상 및 일자리 창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GTX A노선* 등 민원발생 사업 및 민원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 주거지 하부통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성, 소음·진동피해 예상 등을 사유로 반대 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수도권 광역망 확충 등 대심도 사업의 안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승차권 위약금 부담 완화, 지연보상 강화 등으로 철도 이용자 편의 증진 및 광역 급행 철도, 급행역차 운행 확대 등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95.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공항 건설) 김해신공항은 국토부-부울경 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을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총리실 검증 착수**(‘19.12.6)
- 제주 제2공항은 타당성재조사 검토위 연장운영(‘19.4~6, 공개토론회 등), 기본계획(안) 마련(‘19.6) 이후 주민공람(10.18~11.4) 및 유관기관 협의 계속
- 울릉 공항은 국방부 포항~울릉 항로협약(‘19.4), 총사업비 협의(‘19.5)를 완료하여 그간 사업추진 지연요소를 해소 후 설계착수(‘19.12)
- 새만금 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19.2),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19.6)
- (기존공항 시설 확충)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착수(‘19.11) 및 김해 신공항 혼잡완화 조기완료(‘19.12), 국제선 임시터미널 신축 타당성평가 완료(‘19.5)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확장(‘19.6), 관제탑 신축 입찰공고(‘19.12~‘20.1), 진입교차로 입체화 착수(‘19.11) 및 대구공항 터미널 혼잡완화방안 마련(‘19.3)
-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이전 세부계획 마련(‘19.3)
- (해외공항 개발) 해외공항개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19.2) 및 인프라분야 최초로 페루 친체로 PMO사업 정부간 계약 체결(‘19.10)
- 한-사우디 간 공항협력 MOU 체결(12.4, 국토부장관-사우디 교통부장관)
- (공항개발 장기비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착수(‘19.6)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항건설은 소음피해, 재산권 제한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과 갈등 발생 우려가 크므로 지역과 상생방안 마련 필요
- 해외공항 개발에 우리기업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수주지원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추진 과제를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4.7%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인천공항 2터미널 확장공사 착수 등 일부 과제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지역별 신공항 건설 등 과제 추진관련 소통 및 갈등 조정 등 지속 노력하고 주요 공항 수요 확대에 따른 시설 확충, 공항 건설 해외 진출 등 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G2G 해외공항 사업 진출을 통한 기업의 참여 및 해외 수주 경쟁력 제고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86.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자연재해 대비태세 강화) 제주공항 최신 제설장비(시간당 3,375톤 처리)로 교체('19.11), 17개 공항시설 내진보강 사업 완료('19.12 중)
 - * 제주공항 제설 소요시간 : 26분('17) → 20분('18) → 17분('19), (ICAO 기준 30분)
- (항공기 충돌사고 예방) 장애표시등 7,000개소 검사 완료('19.12까지), 조류충돌예방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19.4.19)
- (소음피해 지원방식 개편) 주민 참여형 사업추진체계 개편으로 공항과 지역 주민간 소통·공존·상생 발전모델 구축('19.11)
- (소음 중기계획) 공항소음대책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3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1~'25)」 용역 착수('19.6)
- (고도제한 제도개선)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선을 위한 비행장 패널 회의('19.3.7~10) 참여 및 국내 적용방안 선제적 대응 용역('19.6~) 추진
- (KASS 개발구축) 본격적으로 시스템 제작·구축 단계에 진입하고, 보정된 GPS 신호를 전역에 송신하는 정지궤도위성(1기) 임차계약('19.1)
 - * (SWIM 구축) 전용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한·중·일 간 상호 정보교환 테스트 진행 등 차세대 항공정보교환 인프라 기반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21개소) 중 18개는 '19년까지 계획대로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4개 시설물도 '22년까지 100% 완료 계획('20:3개, '22:1개)
- KASS는 모든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나, 사업규모 및 중요성 등을 감안 할 때 별도조직인 “항공위성항법운영센터”의 조기 신설 추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및 수용량 증대와 운항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여건에 맞는 안전한 항행인프라 구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및 차세대 공항 통신시스템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협의 등에 적극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공항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향상 및 제설 능력 강화를 통한 안전한 공항환경 조성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91.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교통사고 통계) '19.11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3,458→3,025명, 잠정)하여 감축률 대폭 확대('18, △9.7→ '19.11, △12.5%)
- (도심속도 하향) 도심 속도제한 하향(60→50km/h) 정책의 지자체 이행력 제고를 위한 매뉴얼 수립('19.1) 및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19.4~5, 6회)
- (사업용 차량 안전)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변경('19.5.31) 및 장착 대상 확대 방안 마련('19.8.30)
 - * '20~'21.6 출고되는 총중량 20톤 초과, 4축이상 특수용도형 화물·특수차에 대한 지원 예정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률 제고를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15개소) 연계 장착 서비스 제공 및 고속도로·국도 내 전광판(vms) 활용 홍보 강화('19.8~11)
 -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태 개선 및 운행기록 제출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 운행기록장치 시범사업 실시('19.8~12) 및 확산 추진
- (어린이 안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통행시 사고예방을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기준(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기준 등) 신설 근거 마련(교통안전법 개정, '19.11.26)
 - * 주차장법(하준이법) 개정(12.10)으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신설 근거 마련
- (홍보 극대화) 민·관 합동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19.3.6)'를 통해 연간 홍보계획 공유, 합동 캠페인 실시(행락철, 명절 등) 등 협업을 통한 홍보
- (운전자 관리) 버스 내외부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관리 의무 부과('19.10)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대국민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법령 시행('21.4.17) 이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자체의 관심 필요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보행자) 등 주요 추진과제 관련 결과성격의 정량화된 성과지표 발굴 노력 우수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정책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취약 지자체 현장 점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응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변화 추이 등을 감안 교통 사고 사망자 수 및 보행자 사망자수 감소하는 등 정책효과 발생
3-3. 정책만족도	99.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리콜 대응체계 혁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의결('19.11.29)

* 결함은폐 및 늦장리콜 처벌강화, 제작사의 결함 소명 책임 부과, 리콜 적정성 조사 의무화, 제작사의 기술정보자료 제공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 자동차 결함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19.12, 예산 9.8억원), 자동차 안전연구원 사고분석팀 신설('19.1) 및 리콜대응 인력 12명 증원(~'19.9)

- (BMW 화재) 현장조사(20건), '19.5월 이후 관리강화로 리콜(EGR쿨러) 시정율 증가('19.4 89.4% → '19.11 97.7%) 및 결함시정 차량 동일 화재 미발생

- (자동차 검사 신뢰 제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행정처분 규칙, 종합검사 규칙 등 개정* 공포('19.12.9)

* (행정처분 강화) 미자격검사원 검사 등 중대위반 : 2차·3차 → 적발즉시 지정취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 3차→2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일수 가중(10일→30일 등)

** (배출가스 불합격차량 운행제한) 불합격 시기에 따라 72일~10일 → 개정 10일

- (자동차사고 피해자 수요 맞춤형 지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19.12.17)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완화, 성적 등을 요건으로 하는 장학금을 요건 없이 지원하는 학업장려금으로 변경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결함 시정) 판매 前 차량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가 없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판매 전 차량에 대해서도 결함 시정 후 판매토록 제도 개선 필요

- 리콜관련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소비자상담, 현장방문 설명 안내 및 결함시정 사후관리 등을 위한 리콜대응 인력 지속 증원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 내용을 성과지표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5%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사고 피해자 지원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제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하 국회 등 대응 노력 및 신속한 결함 조사 및 결함 시정 조치를 위한 대응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불법 검사 등에 대한 처분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검사 방지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93.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고취약구간 개선) 위험도로(95개소), 사고 잦은 곳(73개소) 등 집중 개선
 - * 야간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조명식 도로표지 설치(342개), 글자크기 확대 등 관련지침 개정('19.8)
-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마을주민 보호구간(50개소), 횡단보도 조명시설 개선(322개소), 보도설치(20개소)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안전사업 확대
- (보행자 중심 설계기준)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할 수 있는 교통 정온화 시설 설치기준 제정('19.2) 및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19.12)
- (졸음쉼터 개량·신설)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안전·편의시설 등을 개량하고(50개소), 졸음쉼터를 추가로 조성('19년, 3개소) 추진
 - * 국도 졸음쉼터 설치기준 제정('19.1), 안전·편의시설 개량(15개), 국도 졸음쉼터 5개년 계획 수립('19.9)
- (작업자 안전)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저감대책 마련('19.5) 및 내비게이션에 작업장 정보 표출체계 구축('19.8)·시범 운영 추진('19.12)
 - * 작업자의 시인성이 강화된 신규 근무복(노랑형광)을 지급하고 임금체계 개선 등 처우개선
- (시설물 안전) 노후교량 개축(11개소) 및 교통량은 많지만 설계하중이 낮은 교량의 성능을 개선(15개소)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도 개선(7개소)
 - 포장 하부의 공동·지반침하 등 보수보강 및 포트홀 제로화 종합대책 마련('19.6)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플랜 부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90년대 확충된 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 필요

* '30년에 노후 교량의 수는 '18년대비 3.8배 증가(3,657→13,884), 터널의 수는 5.0배(82→413) 급증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 관련 성과지표 발굴, 과정 성격 지표 보다 결과형 지표 발굴 노력 필요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도상 줄임선평터 계획 수립 등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사고 잦은곳, 위험도로 개선 등 사고취약구간 개선, 도로 포장 품질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안전 제고
3-3. 정책만족도	97.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변경) '16.6월 제3차 계획('16~'20) 수립 이후, 추가된 안전대책 및 신규이슈를 반영하여 변경(안) 마련('19.12)
 - * (목표강화) ① 사고·사망자수 목표상향('15년 대비 '22년 50% ↓) ② 부상자수 목표 신설 (소요예산) 수정계획 기간('20~'22) 10.0조원(국비 2.7조, 지방비 0.5조, 자체 6.8조) (중점분야) 이행력확보 등 제도개선, 종사자안전, 차량, 시설, 위기대응 및 기술개발
- (종사자 책임·권한 강화) 유지보수·정비작업에 대한 점검실명제 도입 및 결과 기록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기준(고시) 개정('19.10, 시행)
 - 철도종사자 열차운행 중지 요청, 운행 차량 위해행위 처벌 등 「철도안전법」 개정안 입법발의(강훈식 대표발의, '19.7.29)
- (작업 프로세스 개선) 시설관리 수단계에 걸쳐 철도공단-공사 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 구성·운영('19.4~)
 - 철도 운행선로 작업시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해 '운행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시행('19.10, 시행)
- (사고대응체계 개선) 사고·장애 발생 시 초기 상황판단팀 구성 의무화, 이용자 보호기준 등을 포함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19.3)
 - * 우리부 '위기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각 철도운영자가 현장매뉴얼 개정('19.5)
- (철도치안 강화) CCTV 영상압축·분석 SW* 도입('19.10)

□ 개선·보완 필요사항

- '19.9월, 감사원에서 '철도안전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 ⇒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 중(~'20.上)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철도사고 사망자수 등 대표성 있는 결과 성격의 성과지표 발굴 노력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시설 관리 소단계에 걸쳐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 구성·운영 및 현장 종사자 등 의견수렴, 운행 장애 증가에 대응한 안전대책 수립 등 대응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19.10월 기준 1억km 당 철도사고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전년대비 감소 등 정책효과 발생
3-3. 정책만족도	94.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노후시설 개량) 일반·고속철도 시설개량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19년 철도시설 개량 시행계획을 수립·시행('19.2)하여 2,100개소 개량 완료
- (관제센터 개선)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 완료('19.1) 및 구로관제센터 용량확충을 위한 증축 설계착수('19.7)
- (유지관리 개선) 철도시설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 시행령·규칙을 모두 개정하고, 성능평가지침도 제정('19.3)
 - * 철도차량의 정비품질을 향상을 위해 정비조직인증제 및 정비기술자 자격제 등 도입('19.6)
- 이력관리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철도시설 분류체계 표준화' 설계('19.9)
- (안전시설 확충) 승강장 및 선로침입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광역철도 급행역 승강장안전문 설치 확대*, 선로변 방호울타리 설치** 등 추진
 - * 15개 급행역 설계(4월) 및 착공(7월) / ** '18까지 1,817(62.1%) → '19까지 1,987km(67.9%)
-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등을 위해 건널목 입체교차화 방안 마련('19.9) 및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19.12)
 - * 계절별 안전강화방안 마련('19.4, 10) 및 국가철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19.11)
- (시험선로·신호시스템) 철도종합시험선로 준공식 개최('19.3)로 운영 본격화 및 한국형신호시스템(KTCS-2*) 시범사업의 기본설계 완료('19.9)
 - * 무선통신 기반의 레벨-2 수준 시스템(유럽 상용기술인 ETCS-2와 동일수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노후시설 개량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 노후율은 여전히 38% 수준이며 철도건설 예산 대비 11.1% 수준에 불과
 - * 개량투자비율 : 프랑스 33%('11), 독일 51%('10), 일본 20.9%('14), 미국 46%('12)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발굴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관제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구로관제센터 용량 확충 및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추진 등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전년동기 대비 철도사고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운행 장애 발생은 증가하여 장애 발생 예방 노력 필요
3-3. 정책만족도	95.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안전관련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반영한 「항공안전법」 개정완료('19.8)
 - *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플랫폼 구축을 위한 '20년도 R&D 예산 확보('19.8, 35억원) 및 본격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 항공사 3대 주요 고장분야에 대한 지표관리를 통해 전년대비 고장 20% 감소, '14년 이후 가장 낮은 발생률 기록하는 등 취약분야 관리강화
- 비정상자세 예방 및 회복훈련, 조종사별 훈련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역량향상 훈련 등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고도화('19.11)
- 조종사 휴식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객실승무원의 비행 근무·휴식시간 기준 개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9.9)
- 항공사별 안전부문 투자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안전투자 공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항공안전법 개정, '19.11)
- 김포공항 안전강화·운영 효율화를 위해 계류장 관제 전담시설의 신설을 결정('19.9)하고, 관제사 교육훈련 교관·심사관 자격기준 강화
- '83년 이후 36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정상화(관제권 환수 등)를 위한 ICAO와 韓·中·日 간 기본합의 도출('19.11)
 - * 한일 관제중첩구간의 한국으로 관제일원화, 중일노선 항로 복선화, 한중관제 직통선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도쿄올림픽('20.7월말) 이전까지 추진기로 합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조종과실로 인한 이슈 발생 등 운항분야의 내재된 장애요인에 대한 선제적 발굴·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항공안전 관련 대표성있는 결과형 성과지표 발굴 노력 우수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0%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안전도평가 관련 법개정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제주남단 항공회랑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항로 체계로 전환키로 ICAO와 한중일간 기본 합의 도출 등 대응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94.0%	· 목표한 성과지표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항공기 준사고 발생률 등 일부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최근 고장 다빈도 부품의 선제적 교환 및 장비요인 주요고장의 집중 관리를 통해 고장 감소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92.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창업경진대회**(3.18)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우수 인증 활성화 방안***(19.6) 마련
 - * 수수료 인하, 홍보 강화, 신규 인센티브 발굴, 인증 통합시스템 개발 등
- **실거래가 공개기관**(국토부,서울,인천,경기) 간 공개정보 차이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실거래 공개기준 단일화*** 및 **서비스 시행**(19.6)
 - * 공개 DB단일화, 계약일 1일단위 공개, 계약일 기준 통계 및 내역제공 등
- **국민 소득증대와 가계 유동성 흡수**를 위하여 양질의 투자자산 공급, 세제 혜택 부여, 규제완화 등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19.9)
 - * 공공사업 등 양질의 투자자산 공급,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부여, 규제완화 등
- 개발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개정**(19.4.29), 평가업 공정 경쟁을 위한 **표준지 조사 업자선정 기준 개정**(19.7.29)
 - * (개발) 등록업자 정보공시 항목 확대 등 / (평가) 공시업무 참여요건 완화 등
- 부동산서비스산업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향후 5년 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 수립(19.12)
 - * ① 미래 대비 혁신기반 조성, ② 전통 부동산업의 체질 개선, ③ 대국민 신뢰 확보

□ 미흡·원인분석 결과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중개, 임대관리, 이사, 인테리어, 금융 등 **각종 부동산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육성 초기(진흥법 제정, '18.7)로 **홍보·인센티브 등 민간참여 유도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많은 사업자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홍보 강화, 인센티브 적극 발굴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상장리츠 신규 공모금액 등 정량지표 적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사업 추진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포럼, 민관협의체, 창업아이디어 공모 등을 활용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부동산 서비스산업 건전성 확립과 국민체감형 사업인 공모리츠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 발생 노력 중요
3-3. 정책만족도	84.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택시-플랫폼 상생)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19.1.22), 사회적 대타협('19.3.7), 플랫폼운송사업 제도화를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대책 발표('19.7.17)
- (택시업계 체질개선) 사납금 제도폐지 전액관리제(택시월급제) 도입을 위한 여객법 개정·공포('19.8.27),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 등 입법예고('19.11.27)
- (택시규제 혁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웨이고블루) 서비스 첫 출시('19.3.20), 휴업시 번호판 반납제도 폐지('19.3.28),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제완화('19.12.26)
- (버스) 군 운전인력 활용을 통한 신규인력 양성·채용,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점검회의를 통한 300인 이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안착 지원
- (친환경 교통) 선진적인 수소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 발표('19.10.22)
 - * 친환경차 도입 시 버스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및 친환경 사업용 차량 연료보조금 신설 방안 마련('19.12)
- (미래대비 및 국제협력 강화) 2030 모빌리티 로드맵* 마련('19.10.31) 및 OECD 국제교통포럼(ITF) 의장국으로서 교통장관회의 성공적 개최
 - * 수요기반, 예측·회복가능, 차별없는 교통 등 4대 전략과 8개 핵심 사업 포함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19.11) 및 최고속도·통행방법 마련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버스운전직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강화, 버스운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운전인력의 유인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로드맵, 2030 미래 모빌리티 로드맵 수립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반영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사업 추진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8.8%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여객법령 개정 추진 등 일부 지연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플랫폼 등 신 교통서비스 도입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참여한 이해관계자간 적극 대응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택시·플랫폼 업계간 상생방안 마련에 기여, 버스 운전직 인력 확보 지속 노력 중요
3-3. 정책만족도	89.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튜닝 체계 개선 등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마련('19.8.8)
 - 현재 승합차로만 캠핑카 제작 가능하나, 모든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에서 캠핑카 제작이 가능하도록 차종 분류체계 개선('19.8.27. 자관법개정)
-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고전원 전기장치'를 튜닝승인 대상에 포함하여, 미래차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법령개정안 법제처 심사 완료)
- 튜닝 교육 및 컨설팅 사업계획을 마련(9.27), 취업준비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교재 제작 및 업계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사업 추진
- 튜닝부품인증제도 대상품목을 확대(5품목→8품목)하였으며, 안전 관련 부품(LED광원, 조명휠캡)의 인증기준 마련(튜닝부품인증 규정 개정, '19.12)
- '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실시설계('19.12) 완료 및 건립 사업 착수('19.12), 사고 수리시 많이 사용되는 국산차용 (외장)대체부품을 첫 출시*('19.2)
 - * 인증대체부품의 생산 수요가 많은 부품 위주로 대상품목(촉매변환기, 라디에이터 서포트) 및 시험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확대

□ 미흡·원인분석 결과

- 대체부품 관련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자동차 수리 시 부품 선택 고지의무가 있는 정비업계의 참여 부족 등 대체부품 활성화에 한계
 - * 당·정·청 민생현안회의('19.9), 서울오토살롱워크('19.10)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소비자 대상 대체부품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협조 및 대체부품 생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전기장치 튜닝 승인 기준, 국산차 대체부품 인증 마련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사업 추진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5%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총사업비 변경 등 일부 지연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수립,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등을 위한 의견수렴 및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9.0%	· 목표한 성과지표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등 일부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전기장치 튜닝, 대체부품 인증 등 신산업 효과 및 시장창출 효과 지속 발생 중요
3-3. 정책만족도	91.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조종인력양성 협의체 등을 통해 先선발後교육 인원 237명 선발('19.12) 및 하늘드림재단 운영('19.7~)을 통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10명)
 - LCC의 원활한 정비인력 수급을 위해 주력기종 중 하나인 A321 기종 정비전문과정 신규인가(2개 학교, ~'19.11)
 - 국산대체 가능부품 수요조사를 통해 항공부품 발굴('19.5), 이 중 기술 역량이 충분한 항공부품 2종(구명복, 항공화물용 팔레트) 인증서 발급('19.7)
 - 항공부품 국내개발 및 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증 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해 전문검사기관 역량강화 및 인증기술기준 마련('19.12)
 - 인접국(중·일)과 항공교통흐름관리 상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항공기 지연을 개선*하고, 수도권 혼잡공역에 조건부 항공로 시범운영 착수('19.11)
- * '18년 대비 지연시간이 중국방향 5분(21→16분), 동남아방향 1.4분(14.4→13분) 감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항공업계가 필요로 하는 각종 인증서비스(인력, 장비, 시설 확충 등)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검사기관 역량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 항공기 제작산업은 물론 국내 항공사의 국내 부품 지원방안까지 보다 실효성 있는 인증지원체계를 확대·검토함에 따라 지연 발생('19.9→12)
- * 실효성 있게 국내 항공사-제작업체를 중계·연결하는 간담회 2회 개최('19.9)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내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개발수요 정보 공유 등 수요자(항공사)-공급자(제작업체) 간 긴밀한 공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도·절차 안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조종사 先선발後교육, 국산 항공제품 상용화 등 정량적 성과지표 발굴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8.8%	· 추진계획상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전문 검사기관 역량강화 방안 마련 등 일정 다소 지연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일본의 경제 규제 여파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로 인력수급 조정이 발생하였음에도 목표 인원 달성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국산부품 인증서 발급, 조종사 교육에 따른 고용 창출, 인천공항 지연을 감축 등 정책효과 발현을 위한 지속 노력 중요
3-3. 정책만족도	92.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남북철도 연결) 남북협력 재개를 대비하여 제한된 자료와 남측기준을 바탕으로 위해 동·서해선(북측구간)에 대한 **현대화 기본계획**(초안) 마련('19.12월)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동철공 구상·이행방안에 대한 **관련국 의견 수렴·지지 획득 활동 전개** 및 **국내 공론화 노력**을 통해 **이행 로드맵(案)** 마련
 - * 한-중 철도협력회의('19.5), 한-러 교통차관회의('19.6·9),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19.9), 동북아평화협력포럼('19.11), ASEM 교통장관회의('19.12)
- (국제협력 강화) **사장단회의 개최**(‘19.4)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철도운행을 위한 **OSJD 위원회** 및 **관련국 지지 확보** 및 **협력방안 논의**
 - 또한, **장관회의**(‘19.6) 시 **정부협정 가입방안 논의** 및 **‘23년 장관회의 유치**
- (해외진출 지원) 국내 철도용품 성능·신뢰도 검증을 위한 **현차시험**(‘19.10)을 지원하고 **SIL 등 국제인증 취득 13건*** 지원(‘19.12)
 - 페루·파키스탄(9월), 터키·인니(12월) 등 **수주지원단 파견** 및 **고위급 면담** 등 시행, **주요 해외 발주국가 공무원 대상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운영
 - * (제1기) 11개국 22명, ‘18.8.~‘19.8. (제2기) 15개국 20명 ‘19.8~‘20.8

□ 미흡·원인분석 결과

-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올해 **현대화계획 수립** 등 사업에 본격 착수하려 하였으나, 북미회담 결렬(‘19.2) 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륙철도 연결 협력 미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대화 기본계획**(초안)은 향후 북한과 대화재개를 통해 **계획수립 추진 추진**, 대륙철도 업무 신속 추진하기 위한 **각종 연구 확대 추진** 및 **협정가입 로드맵**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국제 철도 시대 선제적 대비 등 추진과제를 반영한 성과 지표 발굴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실현을 위해 국제 세미나, 중국·러시아 등 인접국과의 협력 등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로드맵 마련, OSJD 사장단회 국내 개최를 통한 협력방안 논의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반 구축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88.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시범도시) 시행계획('19.2), 세종 개발('19.6)·실시계획('19.12) 수립, 부산 시범도시 착공('19.11), 서비스로드맵 마련('19.12) 등 미래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 (기존도시) 신규 챌린지 사업('19.5), 특화단지 조성(3곳), 통합플랫폼 사업 확대('19, 27곳) 데이터플랫폼 기반 기술 개발 등 시민체감형 스마트화 추진
- (규제개선) 시범도시 내 9개 신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 도입, 스마트 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19.11), 민간기업 대상 샌드박스 공모사업 추진('19.9~)
- (얼라이언스)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간 기술 협력 채널로서 혁신기술 관련기업 연합체인 얼라이언스 구성('19.2), 해외진출 협력방안 논의
- (산업생태계) 스마트시티 미래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대학 확대, 인턴쉽·창업지원·인큐베이팅 센터 착공('19.11) 등 지원
- (해외진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19.7), 스마트시티 엑스포('19.9) 및 스마트시티 장관회의·페어 개최('19.11), 바르셀로나 엑스포('19.11) 참여
 - * 주요국과 협력MOU 체결(G2G 6건, 공공기관·지자체 14건), 특히 말레이시아와 MOU 체결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모델을 코타키나발루 사업에 도입('19.5~)하는 해외수출 첫 사례
- (홍보강화) 혁신성장 보고회* 개최('19.2), 「도시의 진화, 스마트시티」 다큐 방송('19.9.27·10.2),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오픈('19.12)
 - * 대통령과 부산시민이 함께 스마트 솔루션 시연, MP 시행계획 발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실제 지속가능한 테스트베드로서 조성·운영 될 수 있도록 민·관 SPC 설립 등 세밀한 거버넌스, 운영체계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주요 추진과제를 반영한 성과지표 발굴 우수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 해외진출 토대 마련 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언론 홍보·대응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스마트시티 MOU체결, 해외 협력, 실증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우수, 스마트시티 조성은 사업 초기단계로 향후 정책효과 발현 기대
3-3. 정책만족도	91.9%	

(1) 평가결과

- (선제적 제도정비) 「자율주행자동차법」 조기 제정('19.4), 안전기준 제도화*('19.12.31 공포), 「자동차손배법」 개정도 추진**('19.11 국토위 통과)

* '20년부터 레벨3 자율차 생산·판매 가능하도록 자기인증 기준 신설

** 자율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마련

- (추진전략 마련) 레벨4 자율차 '27년 상용화 등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을 위한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마련('19.10)

- (기술개발 지원) K-City 무료개방('19.3~), 자율차 시험운행 확대('18.12, 60대 → '19.11, 82대), 31개 산학연이 30만장 분량의 주행데이터 공유

- (교통서비스 시범운영) 자율주행 버스 기술 시연('19.10, 세종), 트레일러가 연결된 40톤급 트럭 2대 군집주행 기술 시연('19.11, 여주)

- (인프라) 전국 고속도로를 포함한 5,500km 구간의 정밀도로지도 조기구축('19.12), 민관 공동구축을 위한 MOU 체결('19.4)

- 지역특화 C-ITS 서비스 실증을 위해 지자체(울산, 광주) 인프라 구축 착수('19.9), 통신 보안 확보를 위해 보안인증체계 실증 추진('19년 구축)

- (생태계 기반 조성) C-ITS 표준·인증제도 마련, 실도로 C-ITS 테스트베드(서울 상암) 및 리빙랩(대전·세종) 조성·운영, 소규모 테스트베드 설계 착수(충북 청주)

* 스마트폰 기반 C-ITS 안전 서비스·메시지·알고리즘 개발(삼성전자 협업, '18~'19) 및 표준화 / 전국 C-ITS 인프라 확대 구축(~'24) 대비 기지국 규격서, 정보연계, 아키텍처 등 표준(안) 마련

**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체계 마련 및 싱가포르 ITS WG C-ITS 특별세션 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0.5월 자율차법 시행에 따라 관련 서비스 사업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위법령 마련 및 시범운행지구 지정 준비 등 대비 철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지시사항,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정밀도로지도 조기구축 등 주요 추진 과제를 성과지표로 발굴 노력 우수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민관 17기관의 공동 구축체계 업무협약 체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한 대응 체계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96.0%	· 목표한 성과지표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자율주행차 누적 주행거리 등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자율주행차법 제정, 실증사업 추진,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지속 노력 중요
3-3. 정책만족도	94.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드론 실증도시) 드론시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및 활용수준 도약을 위한 드론 실증도시 2곳(경기 화성, 제주도)지정·운영('19.7~12)
- (시험·실증 지원) 기술경쟁력 강화와 드론 활용 비즈니스모델의 발굴·실증을 위해 시범사업 및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실시
 - * 불법드론 제압(재밍) 장비를 현장 사용 가능토록 '공항시설법' 개정 추진(9.25, 발의)
- (스타트업 지원 강화) 22개 드론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 27억원 규모 지원하여,
 - *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인 2019 CES에 지원 기업 개발제품 출품
- (드론법 제정) 소재·부품(제작), 통신·항행·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드론산업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법' 제정('19.4.30, 공포)
- (인프라 구축)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구축·시범운영('19.9~) 및 안전성 인증 센터('19~'21, 인천 서구), 무인기 통합시험시설('19~'22, 경남 고성) 구축착수('19.12)
 - 조종자격 실기시험장(화성), 복합교육훈련센터(시흥)도 구축 착수('19.12)
- (저변 확대) 국민적 관심 불업을 위해 다양한 대규모 드론 행사 개최 및 해외 주요 수요처·협력업체 초청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도 지원
 - * 드론규제샌드박스박람회('19.3, 세종), 드론산업박람회('19.7, 전주), 서울드론챌린지('19.10, 서울) 등
- (미래기술 투자) 미래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자가용드론(OPPAV) R&D과제 착수('19.7) 및 민관 합동 발전전략협의체를 구축·운영('19.9~)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포괄적 지원규정 위주인 드론법('19.4. 공포, '20.5.시행)의 지원내용을 구체화·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까지 정상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 지시사항,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드론산업육성법 제정,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등 주요 추진과제를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8%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공공분야 임무특화 경진대회 개최 등 일부 지연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드론 전담조직 신설, 드론 분야 정책수립 등 관계 부처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드론산업 육성정책 추진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지속 성장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89.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간정보 산업 지원) 새싹기업(16개) 창업 자금(4억원) 등 지원 및 추가 발굴(10개, '19.11), 스마트 국토엑스포를 개최('19.8)
 - 투르크메니스탄 MOU(4월) 및 해외 로드쇼('19.9'11) 개최 등 해외 진출 지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18개 과정, 29회)
 - * 우즈베키스탄(140억원) 계약, 투르크메니스탄(95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데이터 연계) 공간정보 보유기관과 양방향 연계 확대(기관 30개→37개, 시스템 57개→65개), 정책지도·부동산정보 등 맞춤형 데이터 발굴·제공
 - * 다수기관이 공통 활용가능한 대표 분석과제(4건) 신규 발굴
- (품질관리 /국산S/W 지원) 공간정보 품질평가 최초 수행(대상: 10 부처, 22 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국산 대체를 위한 우수 S/W 선정('19.7)
- (新기술 활성화)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효율적 추진(소요시간 30% 절감) 기반 마련, 정밀도로지도 관련 저가형 MMS 및 지도 자동 갱신기술 개발('18~'21)
- (제도개선 /정보관리) 측량장비 등록기준 현실화 방안('19.12) 등 제도개선 및 측량업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측량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미흡·원인분석 결과

- 「국토정보 통합운영센터」 건립 착공계획수립이 행복청 실시계획 승인 지연(당초 '19년 상반기 예상→ '19.12 승인)에 따라 미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토정보 통합 운영센터(세종 5-1) 착공(당초 '20년 상반기)이 행복청 실시계획 승인 지연(스마트시티 조성 관련)으로 일정 조정 필요
 -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토정보 통합 운영센터의 착공 추진일정 조정('22년 상반기 예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융복합 데이터 발굴, 지적재조사 사업시간 절감 등 정량적 지표 발굴하여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5%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국토정보 통합 운영센터 건립 착공식 계획 수립 등 일부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공간정보 개방, 공간정보 산업 지원, 정책 논의 등을 위해 포럼·TF·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데이터 양방향 연계 확대 등을 통한 데이터 경제 기반 조성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89.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산업구조 혁신) 업역폐지의 후속조치로서 분쟁이 있는 일부 건설업종에 대한 단기 개편방안('19.9) 및 업역폐지 세부시행방안 마련('19.10)
- (일자리 개선)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임금직불제 전면 시행('19.6), 세부운영지침 마련·배포('19.6), 실태점검(5회) 등 전방위 이행노력
 - * 민간공사에서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시 상호협력평가 우대('19.7 평가결과 발표)
- 근로자 경력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확대(건고법 개정, '19.11) 및 취업연계형 도제식 훈련 확대('19. 161명, 직전 2년간 평균 45명 수준)
 - * 기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보완과제를 반영, 건설 일자리 구조적 혁신을 위한 강화된 대책 마련(11월)
- (생산기반 안정)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7.25)」, 건설기계 검사제도 개선방안,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혁신 추진 등 후속조치 추진
 - 남해EEZ 바닷모래 채취 재개('19.7.8)로 골재수급 안정에 기여, 건설기계 수급 안정을 위한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19.7.23)
 - 건설산업 일선 경영측면의 애로요인 규제 26건 개선(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19.8.14)으로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통한 혁신동력 확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업역 폐지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입법조치·시범사업 등 추진과 관행적 현장운영, 건설사 계좌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 근절 추가대책 필요
 - * 일자리 대책, 건설기계 안전대책 등 주요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 업계, 노동계의 지속적 관심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건설 일자리 질 제고, 건설 기자재 수급 안정 등 주요 추진과제를 반영한 성과지표 발굴 노력 우수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업역폐지 세부시행 등에 대한 업계·학계 등 긴밀한 협의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노력 중요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임금직불제, 적정임금 보장, 자재수급안정 등은 국민 체감 노을 것으로 기대,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여 정책효과 기대
3-3. 정책만족도	86.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대규모 펀드) 1.5조원 규모의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을 지원하는 펀드와 신남방·신북방(각 1,100억원)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펀드 조성
- (고위급 수주지원) VIP 신남방 순방('19.3.9), 장·차관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해 말련 스마트시티, 미얀마 경협산단·달라 신도시 등 사업 진출
- (해외진출 전략) KIND의 경쟁력 강화와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별 진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19.6)
 - * ODA사업과 후속사업을 연계하고 후속사업에 우리기업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 선정기준 개선, 관리 강화 등 개편방안 마련('19.12)
- (협력 네트워크 확대) 해외 협력거점 수요 증가에 대응키 위해 기존 3개 해외거점센터를 6개* 핵심국가별 협력센터로 확대·개편
 - * 페루·UAE(既 개소), 우즈베크('19.5. 개소), 인도네시아('19.6. 개소), 베트남·케냐('19.7. 개소)
-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GICC*)를 개최하여 20여건의 고위급 면담과 3건의 MOU 체결, 발주처 설명회 등을 통한 수주기회 확대
- (해외진출 확대) 우리기업의 우수성 홍보, 참여방안 논의 등 외교적 지원 外, 정부가 민·관 동반진출을 주관하고 투자지원을 실시
 - * 미얀마 산업단지, 페루 친체로 신공항, 폴란드 화학플랜트, 런던 실버타운터널, 오만 해수담수화, 베트남 스타레이크 복합시설 수주 등 민·관 동반진출 및 투자지원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외사업 정보부족으로 협력센터 등 해외협력 거점 추가 구축 및 해외사업의 초기의 각종 조사비용 지원 확대 필요
 - * KIND의 타당성조사 지원을 확대('19년 70억원⇨'20년 75억원)하고 KIND의 금융주선 기능을 강화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주선과 자문 제공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글로벌 펀드 조성, 인프라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정량적 성과지표 발굴 노력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KIND 설립, 해외인프라 수주를 위한 공공지원, 간담회 TF 등 정책 수요 발굴 및 현장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금융·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수요 발굴, 해외 수주시장 다변화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90.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스마트 턴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공사에 턴키입찰 허용('19.2), 일반 턴키 입찰 평가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 항목' 추가('19.4)
- (R&D) 스마트건설기술 R&D('20~'25, 약 2천억) 예타통과('19.6, '20 예산 약225억), 도로 스마트 유지·관리 R&D('21~'26, 약 2천억) 예타신청('19.11)
- (정보유통) '03년부터 축적된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정보 전면공개('19.7)
- (창업생태계 조성)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법적근거 마련('19.8 건진법 개정) 및 기업의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 개최('19.11.27~29)
 - * 지원센터 2단계 개소('19.6, 14→21개) 및 2센터('20, 21개 → 50개) 건립 확정
- (발주제도/건설기준 글로벌화) 기술력 중심의 종합 심사낙찰제 운영지침 제정·시행('19.2) 및 기반분야 건설기준 영문화, 건설용어 일제 정비('19.12)
 - * 설계용역 평가 가이드라인 및 용역 손해배상보험, 공제 업무요령(안) 마련('19.12)
- (VE) VE를 통해 공사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절감액의 70%) 제공
- (소규모 엔지니어링 육성) 하도급 신고 활성화 및 소규모 업체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하도급 승인절차 개선
 - ※ (기타) 품셈-시장단가간 차이 큰 공종(243개) 개정, 시장 물가지수 반영한 표준시장단가 개정, 현행 표준품셈 내 유지관리분야 항목 개정, 설계대가기준 개선방안 마련('19.12)

□ 미흡·원인분석 결과

-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초기에 따라 실제 발주청·업계에서의 제도 안착까지 시일이 걸림에 따라 목표 달성 미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술력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적용·운영토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턴키사업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스마트 건설 창업기업 지원 등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발굴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점검회의·세미나·엑스포 개최 등 현장 의견 수렴, 스마트 건설기술 R&D 예타 통과를 위한 타부처 협의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8.9%	· 목표한 성과지표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 건설기술용역 평균 낙찰율 등 일부 과제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스마트 건설기술 성장을 위한 R&D, 엑스포 개최 등 정책 체감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90.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추락사고) 설계~시공 공사단계별 '추락사고 방지대책' 마련('19.4.11) 및 공공 건설공사에 시스템 비계 사용 의무화('19.4)
 - * 소규모 민간공사(20억원 이하)에 도입시 저리 금융지원 추진('19.5~, 실적: 791건 35.8억원) 및 시스템비계 적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가설 설계기준 개정·고시('19.12월)
- (건설사업관리 강화) 건설기술용역 평가결과를 PQ에 반영
 - * 부실 감리자처벌 강화, 착공 전 적정 감리인원 배치계획 수립, 공사중지요건 확대, 공사중지에 따른 면책권 도입 등 추진('19.7월)
- (현장점검 강화)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등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정부가 상시 확인·점검하는 체계 구축('19.7)
- (부실점검 처벌 및 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시설물안전법」*('19.8), 「시설물안전법」**('19.8),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19.12)
 - * 부실점검 업체 처벌강화, 명단공개 및 부실점검에 대한 보완 의무화
 -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 강화
 - *** 제3종시설물의 대상범위를 상향입법하고, 신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 (지진대응체계) SOC 내진성능 지속 확보(98.1%), 제도 개선방안 마련('19.12)
-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19.6)
 - 기반시설법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공통기준(안) 마련('19.12)하고 중요 민간 시설도 기반시설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진법 개정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근원적인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부실점검 근절 지속 노력 및 현장뿐 아니라 산업전반으로 확대 검토 필요
 - *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 및 시설별 기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공통기준 조기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수 등 결과 성격의 정량적 성과지표 발굴 우수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감담회 등을 통한 건설안전 이슈에 대한 대응 실적, 관계부처 TF 및 지자체 협력으로 노후기반시설 선제 대응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97.9%	· 목표한 성과지표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수 등 일부과제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안전 관련 정부예산 대폭 확대, 범부처 연계체계 마련을 통한 향후 정책효과 발생 기반 마련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92.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혁신방안 마련)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물류산업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19.6.26)
 - * 생활 밀착형 물류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의원 발의(8.2)
- (새싹기업 지원) 민간과 협업하여 결성된 물류펀드를 기반으로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투자 지원(4건, 22억원)
 - * (조성규모) 453억원(’17~’25), (투자실적) 4건, 22억원(배달대행, 저온보관 등)
 - **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발굴 → 인큐베이팅 → 창업)
- (인력양성) 국외연수, 국제교류프로그램, 외국어 교육·자격지원 등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및 역량개발 지원
 - IT와의 융복합 등 최근 물류산업 트렌드를 감안, ICT 물류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 및 물류 복수전공 장려
 -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채용상담 및 청년특강을 통한 물류분야 청년 일자리 매칭과 물류산업의 홍보(’19.9.10)
 - * 물류관심 청년 및 구직자 3,914명 참관, 현장면접·채용상담은 3,487건, 현장 면접·사후매칭까지 합쳐 123명(물류기업 107명) 취업(’19.11.30)
 - 물류·유관기업 일자리 정보를 인력DB를 통해 통합제공 및 채용 박람회 사후매칭을 통해 맞춤형일자리 소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물류산업 혁신을 위해 ❶생활물류법안에 대한 이해관계단체 이견 조정과 대안 마련, ❷새싹기업 재정 지원 등 정부 역할, ❸IT 융합 물류인력 양성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고, 택배시장 매출액, 물류기업 취업자 수 등 정량적 지표 발굴 노력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8.8%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 등 일부과제 지연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생활물류법 제정 추진, 물류 전문 인력 창업 교육, 일자리 취업 연계 등 정책 등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99.1%	· 목표한 성과지표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택배시장 매출액 등 일부과제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물류 창업, 물류분야 일자리 창출 등 물류산업 인력 양성 효과에 기여, 생활물류법을 통한 실제 정책효과 발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요
3-3. 정책만족도	90.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물류시설 첨단화,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마련('19.12, 물류시설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물류 R&D) 대규모 물류분야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 스마트 융·복합 물류기술 기획연구' 수행 및 4차 예타 신청('19.11)
- (친환경 물류) 무시동 에어컨 등 핵심사업 포함 지원 및 중소기업 참여 유도 인식 제고사업 토대 마련(1.21), 화물차 연비왕대회 개최('19.9)
 -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중소기업 참여 확대('18. 260 → '19. 295개)
- (친환경 화물차) 화물운송업계 대상 간담회('19.5.21)를 통해 전기·수소 화물자동차 도입 현황·계획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도입 독려
- (사업용 화물차 차령관리) 일정 차령(예 13년) 이상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통과 시 운행제한하는 노후 화물차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위험물질 모니터링) 24시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감시 및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본격 운영 개시('19.6)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제4차 화물자동차휴게시설 종합계획('20~'24) 발표('19.12) 및 사업 추진(휴게소 1·공영차고지 18, 국비 보조금 360억 지원),

□ 미흡·원인분석 결과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심의 지연('19.3월 상임위 상정→12월 상임위 통과)으로 법안 미통과
- (친환경 화물차) 택배업계 간담회('19.7)를 통해 친환경 화물자동차 적극 도입을 독려하였으나, '20년부터 양산됨에 따라 '19년 실제 도입에 한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친환경 화물차가 양산되는 '20년부터 영업용 전기차 적극 보급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에너지 참여 신규업체 수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반영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8.8%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화물차 휴게시설 보조금 교부 등 일부과제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확대, 친환경 화물차 도입 등 주요 사업 지속 추진에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8.7%	· 목표한 성과지표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물류 시설법개정안 국회 통과 등 일부과제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노후화물차 차량관리 제도 도입 관련법 개정과 친환경화물차 도입으로 인한 구체적인 환경개선 효과 중요
3-3. 정책만족도	92.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안전운임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 후 안전운임을 공표하여 차질없는 안전운임제 시행
 - 안전운임 심의를 위한 화물운송원가 조사('19.1~6), 안전운임제 시행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19.6)
 - 이해관계자간 의견 수렴·공론화를 위한 안전운임 TF 구성·운영('19.4~6)을 거쳐 안전운임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발족·운영('19.7~)
- (물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설치·운영('19.3.19), 민관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를 신설('19.3.13)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
- (부정수급 방지) 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체계 구축하고 합동점검 실시* 및 의심거래 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19.2)
 - * ('19.상) 부정수급 화물차주 99명 및 주유업자 17명 적발, ('19.하) 점검 중
- POS 미설치 주유소 유류구매카드 거래 제외, 수급자격 상실자 보조금 지급 사전 차단을 위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등 시스템 연계('19.9)
 -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전년 대비 약 9천대('18 41.1만대→'19 42.0만대) 증가한 반면 유가보조금 지급량은 약 1.5억 ℓ ('18 42.8억 ℓ → '19 41.3억 ℓ) 대폭 감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안전운임) 완전한 합의에 기초한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기간 필요
- (물류신고센터) 다양한 분쟁유형 대처를 위해 접수처 확대, 재정지원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반영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8.5%	·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대부분 적기 완료하였으나, 안전운임위원회 개최 및 안전운임 공표 등 일부 과제지연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업계현안인 안전운임 도입, 물류신고센터 설치·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에 대한 합의 도출 등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율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한 화물차주 운임개선 및 작업여건 개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시행으로 지방 재정 누수 감소 등 정책효과 기대
3-3. 정책만족도	91.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안전) 3조원 후반대 정채되었던 안전예산은 사업내역 발굴 등을 통해 추가 증액하여 '20년 4조원 이상 확보*(19년 3.9조→'20년 4.2조원)
 - *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예산감소(△약 5,700억)에도 불구하고 '19년 안전예산 목록 기준으로 '20년 안전예산(안) 4.2조 달성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예산('19년 3.1조→'20년 3.4조) 편성
- 시설물 안전 관리와 장애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6,106억)' 확대
 - * 철도원격감시 자동검측(신규사업, 355억), 스마트 하천관리(신규사업, 200억) 등
- (혁신성장) R&D 예타 통과를 통한 2,747억원* 규모 신규 투자 창출, 국토교통분야 일자리 1.5만개(목표 1.2만개) 이상 창출 지원
 - * R&D 예타통과 2,747억(국고) : 철도차량부품개발 1,271억, 스마트건설기술 1,476억
- 철도차량 10개부품의 국산화, 미래선도형 5개 부품개발*, 건설공기 단축(25%↓) 등 추진
 - * 고속철도 댐퍼, 공기스프링, 제동디스크 등 10개 부품 국산화를 통한 시장진입 추진 및 경량 전동기, 차량 간 자동연결 및 분리시스템 등 5개 선도 부품 개발
- 민간부문의 신사업 기회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폭을 기존보다 더욱 확대(19→42건)하고 혁신성장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안전사업의 추가발굴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국토교통 안전 분야 예산 4조원 달성, 공공기관 정규직화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전문가 회의, 기업대상 설명회, 현장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적극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안전 관련 예산 확보, R&D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정책효과 발생
3-3. 정책만족도	88.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규제혁신) 규제혁신심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19.3),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건의과제와 법령 등의 개선 및 규제샌드박스 수용 추진
 - * 수용곤란과제 208건을 재검토하여 90건 개선('19.10 기준, 수용률 43.2%)
 - ** 행정규칙에 대한 자체 정비기준 마련('19.2)으로 행정규칙 92개 중 57개 개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 상정된 국토부 소관 안건(31건 중 30건 승인)
- (공공기관 혁신) 산하기관 비정규직 약 4.1만명 중 3.5만명에 대해 전환결정(상시·지속 업무수행자), 이 중 약 2.6만명 전환임용 완료
 -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19.3.19)을 마련하고, 채용비리 전수조사('18.11~'19.1)에 따라 연루자 엄정 제재 및 채용 제도 개선
 - * 채용절차·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칙 마련, 채용비위 징계양정기준 마련, 채용비리 징계 경감 제한, 신규채용 시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등
- (정부혁신) 행정환경 변화 및 적극 행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및 조직을 충원하고, 직원간 소통강화 등 개인·조직 역량강화 추진
 - (조직혁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 및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설치, 관제 및 안전점검 인원 확충
 - (행정혁신) 조직 구성원간 소통·협업 강화 및 개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팀웍빌딩·소통애데이 등 소통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선제적 규제혁신) 지역·업역간 이해관계 대립 및 기존 이익단체의 반발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조정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노사간, 노노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정규직 전환 임용,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규제 개혁, 조직 개편 등 정부혁신의 실효성 제고 및 적시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정부혁신 효과 창출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86.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 눈높이 콘텐츠) 정책성과 체감사례, 정책추진배경의 실제사례 등 사례중심 홍보*를 통해 정책취지·내용의 국민 수용성 제고

*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등 65건 실시(연간 목표: 63건 이상)

- 국정과제인 '서민주거 안정', '교통공공성 강화' 등을 국민 눈높이 (콘텐츠영상·카드뉴스 등)로 제작하여 3,500만명 이상에게 확산
- 크리에이터(유튜버·웹툰) 협업 콘텐츠 확산, 유튜버 협업 영상 시청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등 콘텐츠 확산력 확대

* 이를 위해 국토교통 분야 유튜버(10여명)로 콘텐츠 자문단 Pool 구성('19.9)

- (국민참여 확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총 9회)을 통해 정책 전단계에 걸쳐 국민 의견수렴 강화

- 온라인 채널 신설 등 국민 의견을 듣는 국민 소통 채널 확대하고,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 마련

* 공식 소통 채널인 온통광장에서 정책의견 제시 등 의견 수렴(6.7만명 참여)

- 스마트폰 이용 증가에 대응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고 소통(홍보) 기능이 강화된 대표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

*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63개) 중 1위 달성(랭키닷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트렌드와 국민 눈높이를 감안, 대국민 직접 소통을 위한 정책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디지털 콘텐츠 변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민 공감형 콘텐츠 생산, 소통 참여 국민수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국민참여 확대, 유튜버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및 소통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대국민 소통 강화, 홈페이지 개편, 유튜브 및 SNS 구독자 증가 등 추진 효과 지속 창출 예상
3-3. 정책만족도	91.0%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1-④	○ 지역발전투자협약 정책효과 발생 제고	○ 실집행률 제고, 추진단 구성, 컨설팅단 운영 등으로 적극 성과 창출('20.12.)
	○ 캠퍼스 혁신 파크 중장기전략 마련	○ 선정방법·기준, 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한 「캠퍼스 혁신파크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20.6.)
I-2-②	○ 지하공간정보 구축 예산 증액	○ 지하공간정보 구축 예산 증액 확보('20.12.)
I-2-④	○ 디자인 개선방안,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등 후속조치로 제도 개선 필요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0.1.)
		○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방안 :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20.9.)
Ⅲ-1-②	○ BRT 및 환승센터 부진사업 조속 추진	○ 수원-구로 BRT 건설사업 착공('20.9.)
		○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 착공('20.12.)
Ⅲ-1-③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정 수립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기 완료('19.12.)
Ⅲ-2-④	○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4개) 내진성능확보 추진	○ 나머지 4개시설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연계하여 내진성능 확보(~'22)
	○ 국내여건에 맞는 안전한 항행 인프라 구축 추진	○ KASS 추진상황 점검회의 강화('20. 매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Ⅲ-3-③	○ 도로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	○ 제1차 도로시설물 관리계획(5개년) 수립을 위해 교량, 터널 등 시설물별 최소유지 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정립, 중장기 관리·투자계획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 발주('20.1.)
		○ 도로분야 최소유지관리기준(안)·성능개선 기준(안) 마련('20.5.), 전문가·도로관리기관 의견수렴 실시 및 기준 고시('20.6.)
		○ 제1차 도로시설물 관리계획(안) 마련 및 공청회 실시('20.11.)
		○ 관리계획(안)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상정 및 고시('20.12.)
Ⅳ-1-①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홍보 강화, 인센티브 발굴 추진	○ 우수 인증 홍보 강화방안 수립('20.6.)
Ⅳ-1-③	○ 대체부품 활성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 협조 요청 및 예산 지원	○ 자동차부품(OEM부품, 재생품, 중고품, 대체부품) 선택 고지 의무가 있는 정비 업체 관련기관(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에 협조 요청하여 인증대체부품 홍보 요청('20.3.)
		○ 대체부품 시제품 생산장비 구축 예산 지원('20.3, 전북 군산)
Ⅳ-1-④	○ 선선발 후교육 참여 항공사 확대	○ 신생 항공사 선선발 후교육 참여 계획 마련('20.7.)
	○ 저소득층 훈련생 지원 확대	○ 하늘드림재단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20. 3분기)
		○ 저소득층 훈련생 지원확대('20, 약 30명)
	○ 국내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사-제작업체간 협력체계 강화	○ 국내 항공부품 제작업체 대상 인증제도·절차 등 설명회('20.4.)
		○ 수요(항공사)-공급(제작업체) 간담회('20.6.)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V-1-⑤	○ 현대화 기본계획(안) 고도화 추진 및 대륙철도 신속 추진을 위한 각종 연구 확대 필요	○ 향후 북한과 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철도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미정)
		○ 대륙철도 업무 신속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20. 상반기) * (가칭) 한반도 신경제 지도실현을 위한 철도 인프라 사업전략 구상
IV-2-④	○ 「국토정보 통합운영센터」 건립 착공계획 수립 일정 조정	○ 센터 건립 기획설계 완료('20.12.)
		○ 건축 설계 완료('21.12.)
		○ 건립 착공계획 수립('21.12.)
V-1-③	○ 종심제 도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적용·운영 토록 개선방안 마련 계획('20. 상반기)
V-2-②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 법사위 안전상정 및 본회의 통과('20.)
	○ 친환경 화물차 보급	○ 지자체별 전기 화물차 신규허가 현황 관리 * 1.5톤 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영업용 화물차 신규허가 가능(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택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친환경 화물 자동차 도입 현황 파악 및 도입 독려('20.3) ○ 친환경 화물자동차 대폐차 범위 등 인센 티브 부여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20.3)

[붙임] 2019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국토교통부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 (정부조직법 제42조)

□ 핵심기능

국토·도시	■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정책, 하천관리계획 등 수립·추진 ■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도시공원 등 추진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주택·토지	■ 주택공급 확대 등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 ■ 내집마련 기회 확대 지원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 ■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국가 공간정보체계 기반 조성
건설	■ 건설산업 발전·육성 방안 마련 및 건설일자리 개선대책 추진 ■ 해외건설 활성화 대책 추진 및 글로벌 인프라협력외교 총괄 ■ 건설현장 및 기반시설물 안전대책 수립·추진
교통·물류	■ 종합교통체계, 광역교통체계, 통합연계형 물류체계 구축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교통사고 감축 ■ 자동차 등록·안전관리·운행 등 자동차 정책 수립·추진
항공	■ 항공 관련 제도, 공항 개발, 항공물류 및 항공보안 등 총괄 ■ 항공협정 체결 및 운수권 배분, 항공자유화 ■ 항공사고예방 정책, 공항 소음대책·환경관리 총괄
도로	■ 빠르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국토경쟁력 강화 ■ 안전하고 과학적인 도로관리 등 국가 간선기능 유지 ■ ITS 등 첨단운영체계를 통한 도로교통서비스 제공
철도	■ 철도산업발전 지원 및 국가철도망 구축 ■ 일반·고속·광역·도시철도 제도운용 및 확충, 유지보수 ■ 철도사업제도 운용 및 철도물류체계 개선, 철도산업기술 육성

□ 조직도



※ 한시조직 (1개) : 서울세종고속도로팀('20.2.28일까지 존속)

※ 별도조직 (7개) : 공공주택본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지적재조사기획단,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총액인건비제팀 (1개) : 미래드론교통담당관

※ 긴급대응반 (1개) :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대응반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 조성
----	--

비전	더불어 잘사는 국토,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	------------------------------



전략목표	I. 더불어 잘사는 국토공간을 구현한다.	II.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III.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IV.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을 육성한다.	V. 국토교통 산업의 상생·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	---------------------------------	---	--	---	--

성과목표	1. 국토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하고 쇠퇴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1.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1.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1.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1. 건설산업 문화를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2.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고 품격있는 생활공간을 실현한다.	2.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2. 국가기간 교통망을 지속 확충한다.	2. 생활공간 속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한다.	2. 물류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한다.
			3.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		3. 공공성을 강화하고 약자를 보호한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I) 더불어 잘사는 국토공간을 구현한다.

성과지표

수도권 인구집중도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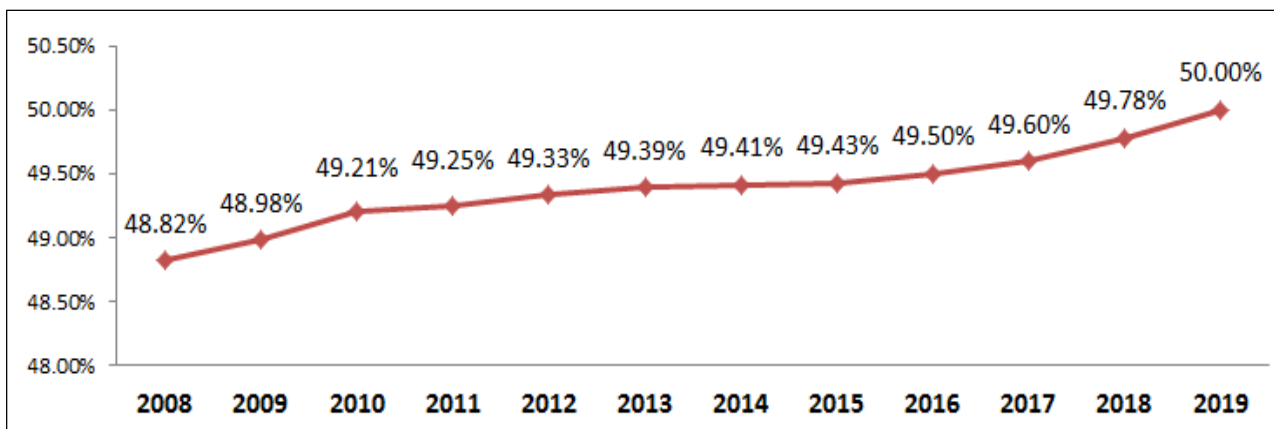
< 수도권 인구집중도 >

- 개념 : 수도권 인구집중도
- 조사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 조사대상 :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제외)
- 조사방법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 측정산식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민등록인구 / 전국 주민등록인구

□ '19년 측정결과

- 현재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2010년부터 약 10년간 49%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점증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시행으로 인구집중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



* '19년 최종 조사결과는 '20.1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통계포털에 게시 예정

□ 성과분석

-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기조에 따라 더불어 잘사는 국토공간 구현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입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생활 SOC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통한 투자 활성화, 지역 상생형 일자리와 산업단지 대개조 등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도 혁신도시, 도시재생, 그리고 새만금, 행복도시 등 주요 성장거점 조성을 통해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먼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19.12)하고, 내실화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산업발전 지원 등을 추진함에 따라 정주 인구와 입주기업이 지속 증가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 (정주인구, 만명) 5.9('14) → 15.0('16) → 19.3('18) → 20.1('19.9)
(입주기업수, 개사) 249('16) → 412('17) → 693('18) → 1,330('19.9)
- 둘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50곳 착공, 98곳 추가 지정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선정 후 즉시 착공,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 *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선정 현황 : ('17년) 68곳 → ('18년) 99곳 → ('19년) 98곳
- 셋째, 입지가 좋은 대학을 활용하여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칸막이 없이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지역의 자립역량을 향상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넷째, 주요 균형발전 거점인 새만금은 공공주도 매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투자기반을 마련하였고, 행복도시는 광역권 상생협의체계 강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보강하였습니다.

- 끝으로, 향후 20년의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서도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일자리·인프라 이외에도 교육·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국가적으로 경제적·사회적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 혁신도시 시군2,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재생, 캠퍼스 혁신파크, 새만금 등 기존 추진 정책의 성과를 본격화하여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 * 5년 후 목표치(%) : '24년 50.5/ 수도권 인구집중 통계청 추계('19.6) : '20년 50.1→'25년 50.7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정주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하여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 그동안 지방에서 하기 힘들었던 대형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히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총 23개 사업 25조원 규모 중 국토교통부 소관은 도로·철도 등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등 15개 사업 22조원 규모
- 도시재생, 산업단지 대개조 등 지역 주민과 기업, 대학 등이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은 성과 창출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지역의 개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지역,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여 발굴하겠습니다.

성과지표

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성과지표 개요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 개념 :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표현하는 지표
- 조사기관 : 국토교통부
- 조사대상 : 전국단위의 주택을 표본으로 조사
- 조사방법 : 총 주택수(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임대주택통계)
- 측정산식 : 총 주택수(A)를 장기공공임대주택수(B)로 나눈 값의 평균치를 구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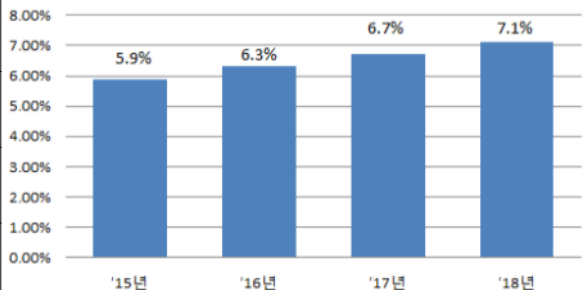
□ '19년 측정결과

- '18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7.1%(148.3만호/2,082만호)로 '17년 기준 6.7%(136.5만호/2,031만호)에 비해 0.4%p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는 매년 10만호에 그쳐 왔으나, '18년에는 약 12만호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 이는 정부가 처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던 '7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추이 >

연도	총 주택수	장기공공임대주택수 (재고율)	재고율 추이
'15	1,956만호	116.3만호(5.9%)	
'16	1,988만호	126.3만호(6.3%)	
'17	2,031만호	136.5만호(6.7%)	
'18	2,082만호	148.3만호(7.1%)	

* 19년 '장기공공임대주택수'의 임대주택 통계는 20년 상반기에 발표예정

□ 성과분석

-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통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 「주거복지로드맵(‘17.10)」,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대책(‘18.7)」, 「아동·비주택 주거지원 강화대책(‘19.10)」 등을 마련·추진 중입니다.
 - 정부 출범부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5년(‘18~’22)동안 공공임대주택 70만2천호를 포함한 공적주택 105만 2천호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22년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공공임대 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고,
 - 임대주택 제고율은 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된 OECD 선진국의 평균 8%를 넘어서는 9%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선진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비교 >

한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독일	OECD 평균
7.1%	32%	24%	19%	18%	18%	16%	9%	6.1%	5%	8%

-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70.2만호중 지난 2년간(‘18~’19) 총 28.6만호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 도시 외곽위주로 공급하던 과거와 달리, 선호도가 높은 도심 위주로 공급을 늘려가고 있으며,
 - 아울러, 청년을 위한 기숙사형·일자리 연계형,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특화형, 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형 등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공적주택 공급계획 및 공급실적 > * 단위: 만호

구분	'18~'22	'18		'19		'20	'20.末누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합계	105.2	19.0	21.3	20.5	21.6	21.0	64
공공임대	70.2	13.2	14.8	13.6	13.8	14.1	42.7
공공지원	20	4	4.6	4	4.7	4	13.3
공공분양	15	1.8	1.9	2.9	3.1	2.9	7.9

○ 이러한 국토부의 정책 노력이 다음과 같은 실제 서민 주거 지표의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① **청년의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감소**(‘17년 3.1→’18년 2.4%)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10.5→9.4%)도 감소하는 등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 ②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17년 44.7%→’18년 48%) 및 **자가보유율**(47.9→50.9%)이 증가하는 등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 **감소**(19.6→19.2%)하였습니다.
- ③ **고령자·취약계층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114만(5.9%) → 111만(5.7%)),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 감소**(17% → 15.5%),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 감소**(2.3→1.9%) 및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31.2㎡→31.7㎡)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 주택 이주를 밀착 지원하는 종합대책 마련(10.24.발표)하고

-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 관심환기 및 주요 언론에서 정책 효과 등을 긍정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건설경제

2019년 10월 26일 (금) 종합 02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임대 3만가구 공급

2019년 10월 26일 (금) 사회 29면

한국경제

국방·고시원 등 취약계층 대상 3년간 3만가구 전세금 등 지원

국방·고시원 등 취약계층 대상 3년간 3만가구 전세금 등 지원

국방·고시원 등 취약계층 대상 3년간 3만가구 전세금 등 지원

김정숙 여사 "누구나 주거권 누릴 수 있는 포용사회 돼야"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9.10.24 19:39 조회 347



꿈을 키우고, 꿈을 찾는 집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2019년 10월 26일 (금) 종합 02면

경향신문

정부 '아동 주거권 보장안' 1면에서 계속

필수 생활기전도 반드시 충족

필수 생활기전도 반드시 충족

필수 생활기전도 반드시 충족

서울신문

2019년 10월 26일 (금) 종합 02면

단칸방 다자녀·쪽방 '설움' 달린다... 임대주택 3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21년에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 등 공공주택 21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 유형통합, 공공임대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수요자별 공급실적 및 계획 > * 단위: 만호

공급유형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청년	21.0	3.6	3.7	4.1	4.8	4.3	4.5	4.5
공공임대	14.0	2.2	2.3	2.7	2.8	2.9	3.1	3.1
공공지원	7.0	1.4	1.4	1.4	2.0	1.4	1.4	1.4
신혼	25.0	3.3	3.0	4.6	4.4	5.2	5.8	6.1
공공임대	23.5	3.0	3.0	4.3	4.4	4.9	5.5	5.8
공공지원	1.5	0.3	0.0	0.3	0.0	0.3	0.3	0.3
고령자	5.0	0.9	1.4	0.9	0.9	1.0	1.1	1.1
일반 취약계층	39.2	9.4	11.3	8.0	8.4	7.6	7.2	7.0
공공임대	27.0	7.1	8.1	5.7	5.7	5.3	4.9	4.7
공공지원	11.5	2.3	3.2	2.3	2.7	2.3	2.3	2.3

-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을 통해 공공임대 재고율이 OECD 평균(8%)을 상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금융지원·복지서비스를 패키지 지원하여 주거지원망 완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성과지표

② 1인당 주거면적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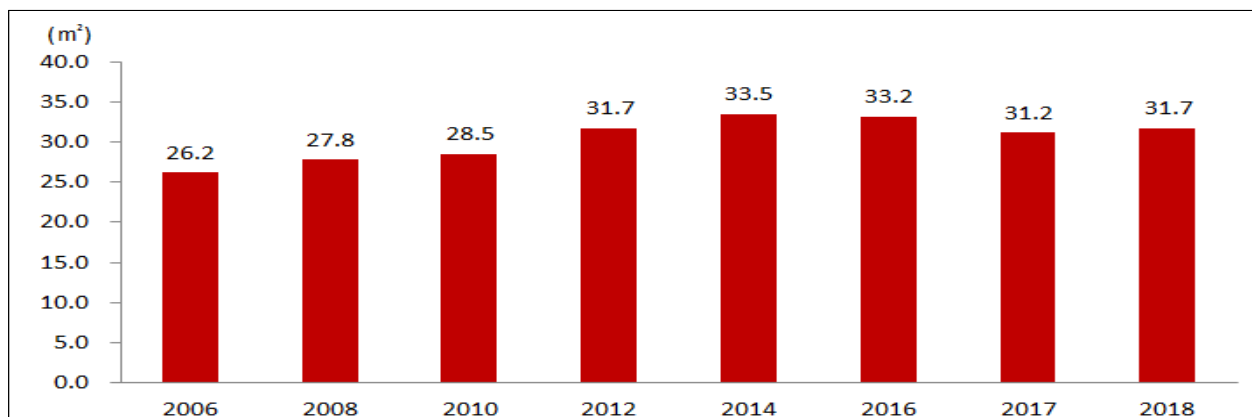
< 1인당 주거면적 >

- 개념 : 1인당 주거면적은 물리적 주거밀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국민의 쾌적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거의 질을 표현하는 지표
- 조사기관 : 국토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단위의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약 6만호)
- 조사방법 : 전국단위 가구방문 및 대면 면접조사 실시
- 측정산식 : 개별가구의 주택사용면적(S_i)를 개별 가구원수(n_i)로 나눈 값의 평균치를 구하여 계산

□ '19년 측정결과

- 2018년도 가구 표본을 대상('19.5.16 결과 발표)으로 실시한 1인당 주거면적은 31.7 m^2 로 2017년(31.2 m^2) 대비 소폭(1.6%p) 증가하였습니다.
- '17년도 이전 수치는 객관화된 통계자료가 아니므로(행정자료 미활용), '17년도 이후 통계부터 비교 시 1인당 주거면적의 점진적 향상을 기대합니다.

< 1인당 주거면적 >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 '1인당 주거면적'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전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익년도 상반기 중 발표되므로, '19년도 표본의 조사결과는 '20년 상반기 중 도출 예정

□ 성과분석

- 국민들이 주거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충분한 생활공간**을 갖추고, **양호한 품질**을 확보한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 특히, **신혼부부·청년** 등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계층을 위해 **신혼특화, 역세권 인근** 등 수요자 요구 반영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면적을 포함한 거주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부 국정과제(46번, 47번) 과제와 연계하여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신혼부부·청년** 등 취약계층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등 시행

◆‘19년 12월말 기준 유형별·계층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단위 : 만호, %)

구분	합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년계획	실적	%	년계획	실적	%	년계획	실적	%	년계획	실적	%
합계	13.6	13.9	102	6.0	6.0	100	3.1	3.1	99	4.5	4.8	107
청년	2.7	2.8	105	1.0	1.1	110	0.4	0.4	106	1.3	1.3	102
신혼	4.3	4.4	102	1.4	1.4	100	1.7	1.6	97	1.2	1.3	110
고령자	0.9	0.9	105	0.5	0.6	115	0.1	0.1	69	0.3	0.3	100
일반취약	5.7	5.7	100	3.1	2.9	94	0.9	0.9	104	1.7	1.9	110

- 또한,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대출제도 개선**으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생활에 쾌적한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p 하락 전망(국토연구원)

- **인구정책TF(기재부 주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등을 재추정하여 향후 국민의 주거수요를 예측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고령자 가구·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고령자 주택**과 **소형가구 주택(1~2인)**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 1인당 주거면적의 '17년도 계량수치부터 신뢰성을 가지므로 1년간 증가량(0.5㎡)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향후 5년 후 목표치: '24년 33.7㎡

- 주거공간이 확보된 양질의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22년에는 장기공적 임대주택 재고비율 9% 달성하고자 합니다.

* 공적임대주택 17만호(공공임대 13만호 +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공급(매년)

** 장기공적 임대주택 재고비율 OECD 수준인 9% 달성('22년)

- 대출조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도 쾌적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 계층도 임대료가 저렴한 세어하우스를 공급하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청년 주택 등 건설 및 임차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주택구입·임차자금 8만호 지원, 청년 임차자금 8만호 지원 목표(매년)

<역세권 청년하우스>

지하철역이나 대학 가까운 곳의 오래된 고시원을 리모델링해서 역세권 청년하우스로 공급합니다

역세권 청년하우스 공급을 위한 2020년 예산 2,850억원

역세권 청년하우스는요~

- 학교와 가깝고 출퇴근하기 좋은 위치의 노후 고시원 매입 후 리모델링
- 침실, 욕실 등 개인공간을 보장하는 청년 세어하우스로 공급
-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20만원, 학기 단위로 유연한 계약기간 적용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예산활용>

국민의 집 걱정 덜어주는 2020년 국토교통 예산

부주택 서민을 위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 확대 7조 8,422억 → 9조 6,422억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3조 7,070억 → 3조 8,429억
오래된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택 만들기 500억	책방, 노후고시원 등 일시거처 거주자 이주 지원 사업 20억 (국민참여예산)

-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유주택의 개념 정립, 독립·공유공간에 대한 설계·건설기준 설정 등

- 인구정책TF에서 추계된 주거수요를 바탕으로, 소규모 가정 주택수급 계획을 반영한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성과지표 개요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 개념 :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 조사기관 : 경찰청 통계(교통사고) 및 국토부·농림부 등 통계(자동차·농기계)
- 조사대상 : 교통사고 인한 사망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 조사방법 : 경찰청 통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확인, 국토부(자동차)·농림부(농기계) 등 통계로 자동차 등록대수 확인
- 측정산식 : ('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자동차 등록대수) × 10,000

□ '19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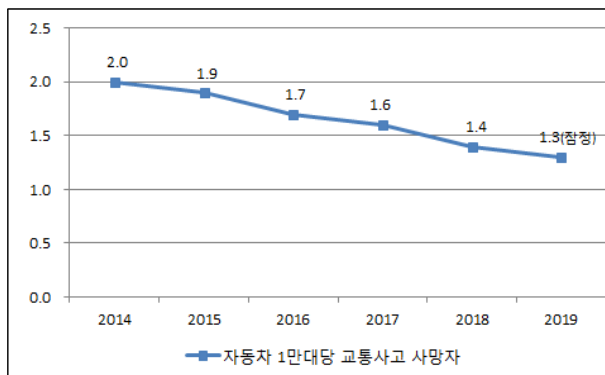
○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교통 안전 지표로서, OECD 국가의 교통 관련 지표로 활용 중입니다.

○ '19년 교통사고 사망자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명(잠정)으로 예상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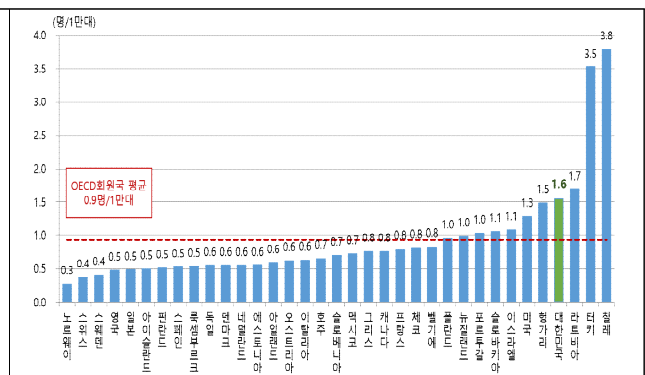
* '19년 교통사고 확정통계는 '20.2월경에 산출 예정

- '14년 2.0명 → '16년 1.7명 → '18년 1.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국가 수준(0.9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OECD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성과분석

- (성과) 국민의 교통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 기관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18.1)을 수립하였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 관리로, ’18년에 이어 ’19년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18년) ’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 진입/ (’19년) ’02년 이후 처음으로 2자리 감축률 달성

- (보행자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보행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도시부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18)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보행사망자 1,48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0% 차지

- 도심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는 제도의 전국적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매뉴얼을 수립하고, 차량의 저속 운행 유도를 위한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도 마련하여 차량 우선에서 보행자 우선 도로 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도심 제한속도를 하향(60→50km/h)하는 도로교통법령 개정(’19.4.17, ’21.4.17 시행)

** 회전교차로, 차로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서행운전 유도

- 안전속도5030 영상을 제작하고, TV·고속철·아파트엘리베이터·옥외광고 송출 등 노출을 확대하여 속도하향 정책의 이해도 및 국민의 수용성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시설개선) 국도·지자체 사고 취약지역에 대해 도로의 구조개선 및交通安全시설물 등을 설치·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마을주민 보호구간(60개소) 조명시설(1,088개소), 사고찾은곳(73개소), 위험도로(142개소) 등

- (사업용차량 안전)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 사업을 실시하여 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였습니다.

- (교통약자 안전) 고령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글자 크기를 확대(22→24cm)하는 도로표지규칙을 개정(8월)하고, 조명식 도로표지(342개)를 설치하는 등 고령운전자를 배려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등 어린이·고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용품(어린이 카시트, 야광지팡이 등) 보급사업*도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 안전을 확보하도록 추진 하였습니다.

*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1,500대), 맞춤형 교육 시 야광지팡이(15,000개) 등 보급

□ 향후 추진계획

- (목표)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2,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자동차 1만 대 당 사망자 수는 주요 OECD 국가 평균(0.9명) 수준으로 목표를 세워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 ('18) 1.4명 → ('19) 1.3명(잠정) → ('22) 0.9명
- (대책 마련) 이에, 기존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재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완과 세부 원인분석을 통한 '20년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보행자 우선 교통환경 조성) 도심 내 속도하향 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보행자 사망자를 감축하며,
 - (공공도로 외 구역 안전) 아파트 단지 내 맞춤형 교통안전 기준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기준 등) 등을 규정한 법령도 신설하여 안전 사각 지대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 (화물차 안전) 국토부·경찰청이 협업하여 합동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20.6)하여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도 예방할 계획입니다.

* (일본) 로프 두께별로 인장력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적재방법 규정

- (시설 개선) 국도상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졸음사고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국도 내 졸음쉼터도 확대*할 계획이며,

* (고속·민자도로) 15개소 신규 설치 및 63개소 시설개선 / (국도) 10개소 신규 설치

- (교육 확대)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지속 실시하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기존보다 고령자 교육을 확대('19년 3,709개소 → '20년 5,364개소, 44.6% 확대)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성과지표

②-1 철도 연장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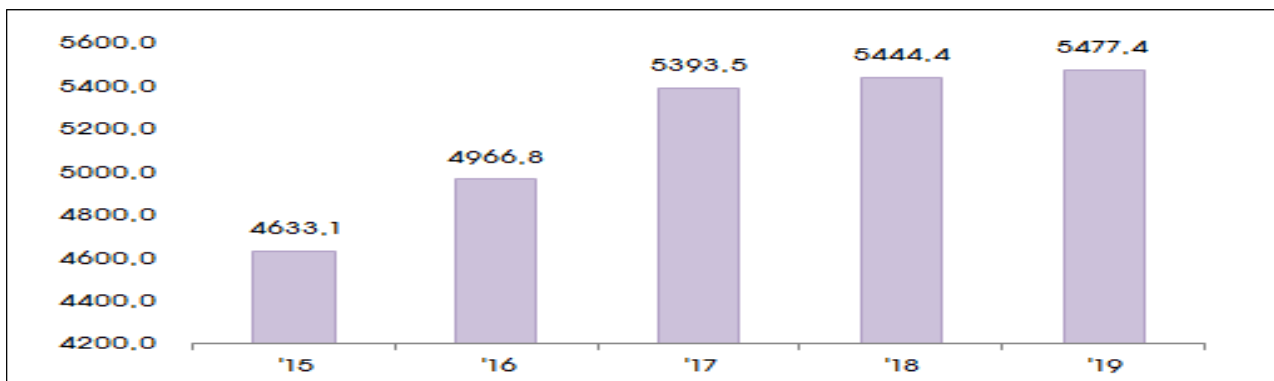
〈 철도 연장 〉

- 개념 :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하여 신규 철도 건설(개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로 인해 증가하는 연장 현황을 측정
- 조사기관 :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기관
- 조사방법 : 내부 통계 자료
- 측정산식 : 전국 철도연장(고속, 광역, 일반, 도시철도 등 연장) 합산

□ '19년 측정결과

- 철도연장 '19년 실적(예측치)은 5,477.4km로 당초 '19년 목표치인 5,477.3km(전년 대비 32.9km 증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 철도건설은 대규모 재정투자로서, 특성상 관계부처 이견과 지역 주민 민원에 영향을 받아 계획 대비 지연 가능성이 높으나,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이동, 통근 수요 등 국민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19년에도 포항~영일만(9.3km), 김포 도시철도(23.7km) 노선을 적기에 개통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 연장 추이>



□ 성과 분석

- 철도연장의 증가는 철도 수혜지역의 확대를 통해 국민이 지역 간 이동을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 철도는 높은 정시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주요 도시를 2시간대에 연결(고속·일반철도)하고,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광역철도)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20년 철도부문 예산규모 69,474조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여 철도 중심의 교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SOC 예산 변동 현황>

구분	'16	'17	'18	'19	'20
도로(조원)	82,803	73,534	59,269	60,337	69,166
철도(조원)	74,646	72,105	52,079	57,283	69,474

-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속·일반 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강릉선(원주~강릉, '17.12), 동해선(포항~영덕, '18.1), 서해선(소사~원시, '18.6) 등 신규 철도망을 개통하였습니다.
- 강릉선은 수도권과 강원도 간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2018 평창 올림픽의 원활한 수송에 크게 기여하였고, IOC는 평창 올림픽의 대표적 유산으로 고속철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동해선, 서해선 개통도 교통시설이 미흡한 동해안 지역의 불편해소 및 경기 서부 지역의 교통난 완화에 일조하였습니다.



- 그 밖에도 호남고속철(광주송정~고막원) 개량을 완료('19.4)하고,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19.7)하였으며,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를 개통('19.12)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1)」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후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신안산선, 신분당선 등 그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도심의 광역급행노선의 추진을 조기에 확정짓고 단계적으로 착수·개통함으로써 수도권 교통 편의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GTX A노선 착공('18.12),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19.8), C노선 기본계획 착수('19.6), 신안산선 착공('19.8),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1) 등 성과를 내었으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구간 예상 단축 시간>

구분	A노선	B노선	C노선	신안산선
주요구간 이동시간	파주~서울역 (60분→20분)	송도~서울역 (80분 → 27분)	의정부~삼성 (60분 → 18분)	한양대~여의도 25분 원시~여의도 36분

- 국토교통부는 국내 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하여도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가 대륙철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도록 남북철도 공동조사('18.11~12), 남북철도 연결·현대화 착공식('18.12)을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동아시아 평화기반 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세부 구상과 설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세미나를 개최('19.9)하여 관련국에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18.6) 후 OSJD 장관회의에 정회원으로서 참석('19.6)하고, '23년 장관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등 국제철도 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전역 철도망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노선 구축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고속 · 일반 · 광역 철도망 구축 방향을 큰 틀에서 정의하는 최상위 법정계획

- 신규 필요 철도 노선을 면밀히 파악하고, 균형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부분)개통 및 착공 예정인 노선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2020년 개통 및 착공 예정 철도노선 >

구 분	노 선 명	
완전개통 (6개)	▶ 대구선 동대구~영천 ▶ 중앙선 원주~제천 ▶ 장항선 익산~대야	▶ 수인선 수원~한대앞 ▶ 울산신항 인입철도 ▶ 군장산단 인입철도
부분개통 (3개)	▶ 경의선 문산~임진강 전철화 ▶ 장항선 남포~간치	▶ 중앙선 도담~안동(하선 운행선 변경)
착 공 (5개)	▶ 경의선 임진강~도라산 전철화 ▶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 호남고속철 2단계 고막원~목포 ▶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륙철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지표

②-2 도로 연장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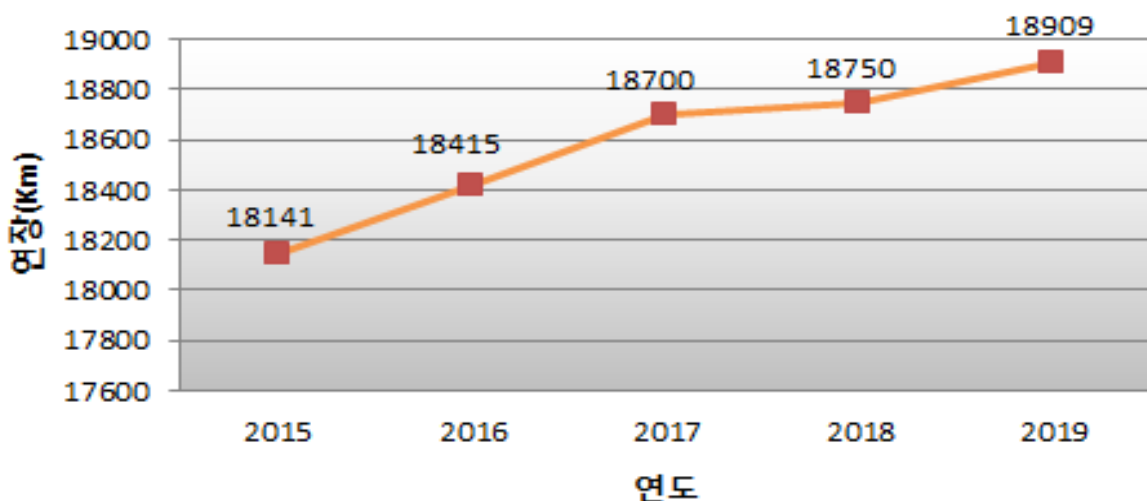
< 지표명 >

- 개념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선도로망(고속 및 일반국도)의 연장 증가 현황을 표현하는 지표
- 조사기관 : 전국 380여개 도로관리청의 도로 현황 통계 조사
- 조사대상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도로 현황
- 조사방법 : 도로 및 보수현황시스템(RSIS)을 통해 익년 1분기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도로 현황 통계 수집
- 측정산식 : 도로관리청별 연장 현황을 합하여 계산

□ '19년 측정결과

- 2019년 간선도로(고속·일반국도) 예상 연장은 18,909km이며, 2018년 대비 소폭 증가(0.8%)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4%로 증가 추세입니다.
- 다만, '19년 측정결과는 '19년 준공 예상 연장만 포함하였으며, 선형 개량 등에 따라 연장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20년 3월에 확정됩니다.

<간선도로 연장 추이>



□ 성과분석

- 최근 5년간 간선도로망의 계속된 확충으로 잦은 혼잡구간 완화 및 도로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였습니다.
 - * (고속도로) '15년 4,139km → '19년 4,767km, (국도) '15년 13,950km → '19년 약 14,142km
- 고속도로는 '19년 신설 개통된 연장이 없으나, 서해안선 평택-서평택 고속도로를 확장(9.0km(6→8·10차로))하였습니다.
 - 도로 확장에 따라 평균 통행속도는 19km/h(70→89km/h) 빨라져, 연간 약 128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 일반국도는 덕례-용강 등 21개 사업 158.8km를 개통하였습니다.
 - 아울러, 일반국도 도로 개통으로 운행거리 135km(340→205km), 운행시간 293분(494분→201분)을 단축하였습니다.
- 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신속 추진을 위해 '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 경부선 북구미 등 하이패스 IC 4개소를 착공('19.8) 하고 중부내륙선 충주(휴) 하이패스 IC 1개소를 개통('19.12)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속도로 접근성 및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 (단축효과) 거리단축 4.6km/개소, 시간단축 8.9분/개소, (연간편익) 41.7억원/개소/년
- 그 밖에도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위험도로 및 사고 잦은 곳 개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횡단보도 조명시설 개선, 보도설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확대하고, 졸음쉼터 확충 및 개량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개선 구간과 전국 국도의 사고발생건수 비교>

구분	사전 ('09년~'11년)			사후 ('15년~'17년)			감소효과(%)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개선 구간	54	8	91	15	1	29	72.2%	87.5%	68.1%
전국 국도	96,628	4,436	172,109	51,358	2,305	88,996	46.8%	48.0%	48.3%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효과 분석>

구 분	사고건수	사상자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5년	43% (119.7건 → 68건)	54% (254명 → 116명)	73% (3.7명 → 1명)	54% (250.3명 → 115명)
2016년	14% (48.7건 → 42건)	33% (101.1명 → 68명)	63% (2.7명 → 1명)	32% (98.3명 → 67명)

* 시행 전 3년 평균 대비 시행 후 1년 평균으로 효과분석

- 더불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고속도로 조성을 위해 '18년부터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천안논산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하고,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었습니다.

* 서울외곽(4,800원 → 3,200원, 33%↓), 천안논산(9,400원 → 4,900원, 47.9%↓)

□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도로망의 장래 도로교통 여건변화 등을 검토하여 미래 도로정책을 발굴하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년마다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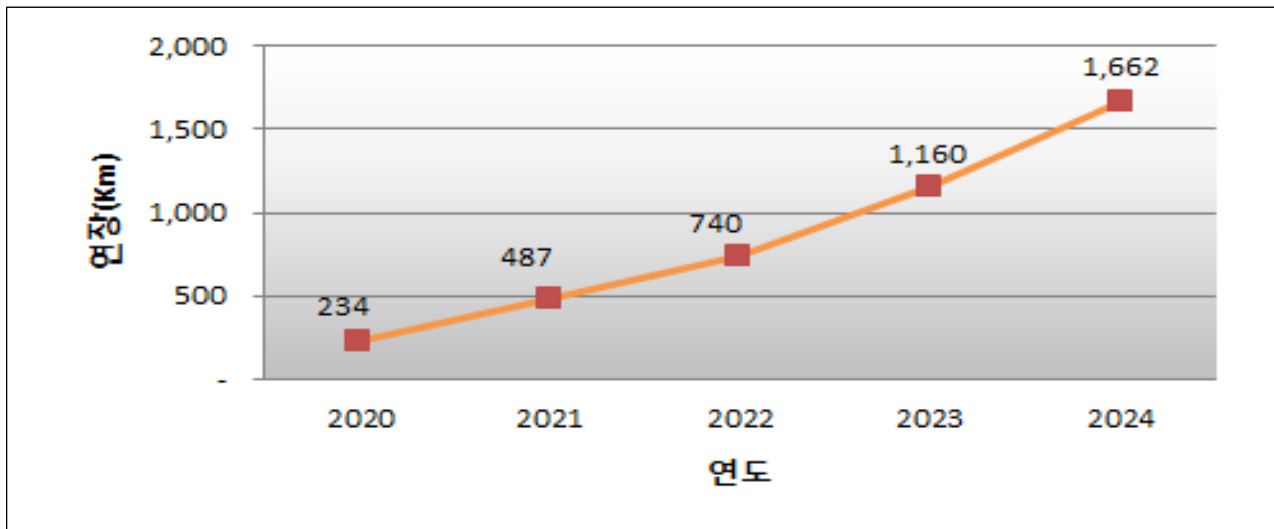
- 기존 지역 연결 및 공급 위주의 국가도로 정책에서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기반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지역 간 연계발전, 국가경제 활성화, 미래사회 준비에 이르기까지 시간-공간-사회를 모두 연결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관리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도로정책의 장기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 또한, 여객·화물 이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효율성 강화와 교통 혼잡 해소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하겠습니다.
- 따라서, 간선도로 관련 건설계획 등을 통해 향후 5년간(2020~2024년) 간선도로를 1,662.4km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 (재정고속도로) '24년까지 대구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고속도로 등 12개 사업, 533.7km 신설 개통 추진

(민자고속도로) '24년까지 서울-문산고속도로, 봉담-송산고속도로 등 6개 사업, 227.9km 신설 개통 추진

(일반국도) '24년까지 거제-마산 등 109개 사업, 900.8km 신설 개통 추진

<향후 5년간 간선도로 추가 확충 연장 추이>



<향후 5년간 간선도로 신설 개통 계획>

구 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재정 고속	연장(km)	533.7	45.2	32.4	126.9	135.4	193.8
	사업	12건	함양-울산 (밀양-울산)	대구순환	광주순환 안성-구리 화도-양평 당진-천안 (염치-천안)	함양-울산 (창녕-밀양) 파주-포천 포항-영덕 광주-강진	함양-울산 (함양-창녕) 새만금-전주 세종-안성 문산-도리산
민자 고속	연장(km)	227.9	35.2	18.3	31.2	28.7	114.5
	사업	6건	서울-문산	봉담-송산	이천-오산	포천-화도	광명-서울 평택-익산 (1단계)
일반 국도	연장(km)	900.8	154.0	202.1	94.3	255.9	194.5
	사업	109건	거제-마산 등 19건	보령-태안 등 26건	상패-청산 등 13건	보령-부여 등 29건	무계-삼계 등 22건

- 아울러, 향후에도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도로 안전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IV)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을 육성한다.

성과지표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수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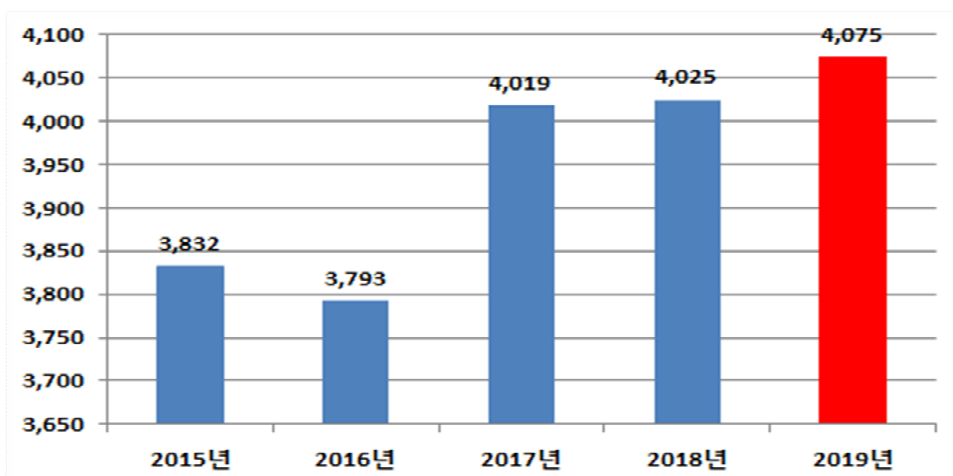
〈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수 〉

- 개념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중 국토교통부 소관 업종의 취업자 수
- 조사기관 : 통계청
- 조사대상 : 전국 231,1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15세이상 가구원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측정산식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중 국토교통부 소관 업종의 취업자 수 합산
(소분류 기준 : 건물건설업, 육상 여객 운송업 등 22개 업종)

□ '19년 측정결과

- '19년 4월 기준 국토교통 소관분야 취업자수는 407.5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17년을 기점으로 취업자 수 400만명을 초과한 이후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18~'19년에도 완만한 상승세 유지 중 입니다.

<최근 5년 국토교통 소관분야 취업자 수(단위 : 천명)>



□ 성과분석

①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지원('19년 11개 시범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19년 3개소 선정) 등 “지역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유도”
- 대규모 프로젝트(화성 테마파크, GBC 등) 추진 지원, 중앙도시첨·수도권 정비청 등 심의주기 단축, LH투자절차 간소화 등 “대기 투자 조기추진”
- 혁신지구 도입, 어울림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등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 및 정주여건 마련”

② 7대 혁신기술 등을 통한 신산업 핵심인재 육성

- 혁신성장 및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 R&D 확대 ('19)4.8→('22)5.4천억원)”, 혁신펀드* 조성으로 “우수 신기술 사업화 지원”
 - * 펀드조성 : '20~'27년까지 총 2,748억원(정부출자 1,467억원 / 민간출자 1,281억원)
운영체계 : (출자) 국토부→(모펀드) 한국벤처투자→(자펀드) 민간운용사→국토교통 기업 투자
-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 수소경제 활성화(시범도시 지정·충전소 확충), 스마트시티를 통한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 등 “7대 혁신기술* 인재 양성”
 - * ¹⁾스마트건설, ²⁾수소경제, ³⁾스마트시티, ⁴⁾드론, ⁵⁾자율주행차, ⁶⁾제로에너지건축, ⁷⁾데이터경제

③ 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의 질 개선 및 고용 창출

-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공기산정기준 법제화 등 공정 공사환경 조성 및 적정임금제 도입, 불법외국인력 차단 등 “건설산업 일자리 혁신”
 -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전면 시행('19.6), 체당금 지급한도 상향 (400→1,000만원, '19.7), 적정임금제 선도도입(20개소) 등 임금보장 강화
 - * 임금직불제, 불법 노무행위 처벌강화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행('19.6)

- 퇴직공제 日납입액 인상(4,200→5,000원, '18.1), 전자카드제·기능인
등급제 입법화 등 근로환경 개선과 숙련인력 양성도 추진

*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등 건설근로자 고용법 개정 완료('19.11)

- 주 52시간 근무시간 도입 등 “노선버스 공공성·안전성 강화”하고,
월급제 시행,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 (노선버스) 군·경 운전인력 자격취득 및 운전자 양성교육 지원, 취업
박람회('19. 3회),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지원
- (택시종사자) 택시 월급제 시행,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등을 통해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산업체질 개선 유도
-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부동산 전문인력(자산운용, 감정평가)
등 “부동산업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항공조종사·정비사 先선발 後교육제도 도입 등 “항공 전문인력
양성 강화”와 함께 튜닝시장, 대체부품 등 “자동차 A/S시장 활성화”

④ 안전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전문가 양성

-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 촉진·관리대상 확대(통신구,
송유관 등 15종), 화재·지진 대비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1.0}19→^{2.0}31개)
- 시스템 작업대 사용 의무화 등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주력 및
“교통안전 강화(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 설치, 국적항공사 안전·관리 인력 증원)”

⑤ 창업 촉진 및 구직자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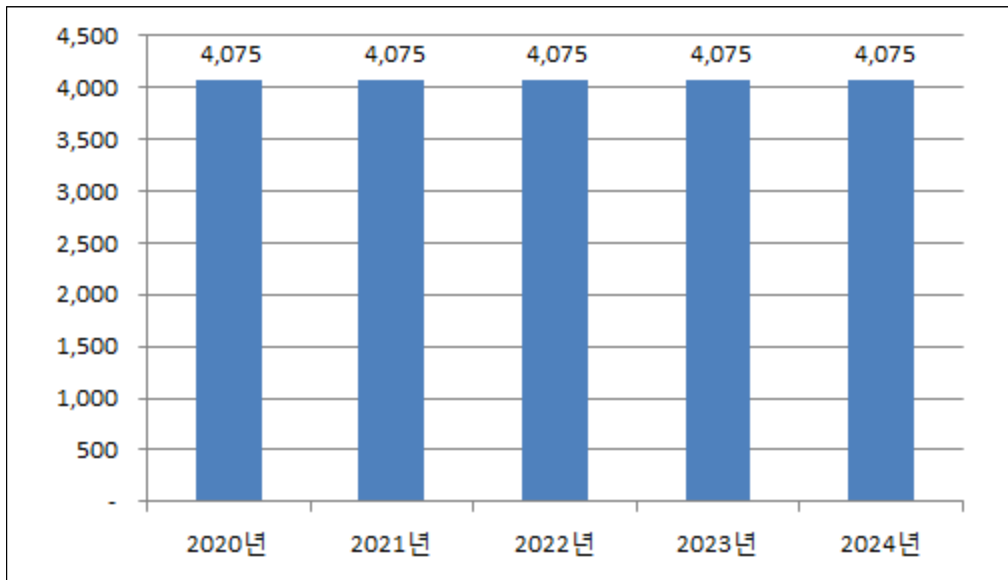
- 고속도로, 철도역사·공항 등을 활용하여 “창업공간 제공 및 컨설팅”,
인턴십·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연계 강화” 및 “교육비·주거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에 따른 고용감소 요인을 극복하여, 앞으로 5개년 동안 '19년 취업자수(407.5만명) 수준 유지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17년부터 10년간 250만명 감소 예상

< 향후 5개년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목표(단위 : 천명)>



-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개선(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19.8) 하고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 대규모 투자건설 활성화* 지속추진
 - 또한, 국토교통분야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개선, 고용안전망 구축 등 일자리 체질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병행
- * '19년 19.8조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3조원을 '20년 정부SOC 예산 반영
- 혁신성장 및 미래산업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여 신산업분야 미래일자리 확보
- 기술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 수소경제 활성화, 스마트시티, 드론 등 국토교통 소관분야 7대 혁신기술 지원확대를 통한 인재육성 추진

성과지표

①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결과

□ 성과지표 개요

〈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지수〉

- 개념 : 글로벌 건설 경쟁력 평가 및 해외건설 Big 이슈개발 등을 통한 글로벌 건설정책 서비스를 제공(2011년부터 연구결과 발표)
- 조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조사대상 :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지표(건설시장 안정성, 건설제도, 인프라), 건설 역량평가 지표(시공경쟁력, 설계경쟁력, 가격경쟁력)
- 조사방법
 -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측정을 위해 통계청, 국제투명성기구,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등의 데이터를 활용
 - 국가별 건설 역량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COMPASS 및 ENR 데이터를 활용
- * 측정산식 :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과 국가별 건설역량 상대평가 점수를 가중평균(건설인프라경쟁력*0.4+건설역량 점수*0.6)

□ '19년 측정결과(잠정치, 최종 결과는 '20.2월경 발표)

- '19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평가 결과, 전년대비(71.0점) 0.1% 상승한 71.7점을 기록하며 20개국 중 9위(18.12위)로 상승했습니다.
- 세부 평가지표에서는 글로벌 건설환경 경쟁력이 13위를 차지하였으며, 건설기업 경쟁력은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국가별 건설기업 경쟁력 지수 중 건설산업경쟁력과 시공 경쟁력이 종합평가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 최근 3년간 순위('17→'18→'19) : 건설산업경쟁력(신규지표, 4위), 시공경쟁력(7위→10위→7위), 건설시장 안정성(10위→15위→16위), 건설제도(12위→12위→10위), 설계경쟁력(13위→13위→14위)

□ 성과분석

- 건설산업의 활력을 제고하여 건설경기 하락에 대응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건설 신기술 육성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임금직불제 전면 시행('19.6), 건설 일자리 강화대책 마련('19.11) 등 건설혁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 * 산업구조 혁신은 업계간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역개편 TF, 개별 비공식 회의(약 20차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의 방안 마련
- 1.5조원 규모(공공6천억+민간9천억)의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고위급 수주지원과 국가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19.6)을 수립하였습니다.
- 또한, 건설경기 하락세에 대응하여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19.8)하고 업계 경영에 불합리한 규제 26건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 한편,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대책('19.7), 건설기계 검사제도 개선방안('19.11) 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19.6)한 바 있습니다.
 - * 기반시설 안전강화 예산 전년대비 37.4%('19년 4.0조원 → '20년 5.5조원) 확대
- 아울러,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대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R&D 예타통과('19.6)후 예산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 * '20~'25년간 약 2천억원 규모, '20년 예산 정부안 500억원 반영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개소('18.9) 후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을 단계적 확대('19.6, 2단계)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입주기업 확대(14→21개), 창업 연차에 따라 제품화연구·현장실증·투자 등 맞춤형 지원

○ 다만, 건설안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대책이 시급하고,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세부적으로, 건설안전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19.4) 등을 수립하여, 설계~시공 공사단계별 안전장치를 강화하였으나, 건설현장 일선의 세밀한 관리와 구조적인 안전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 건설현장 전체사망자 : ('18.10월 누계) 400명 → ('19.10월 누계) 381명(19명 감소)
건설현장 추락사망자 : ('18.10월 누계) 242명 → ('19.10월 누계) 239명(3명 감소)

- 해외건설 수주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이며, 수주지원단 파견, 금융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해외수주 실적을 높이는데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 수주액(억불) : ('14)660 → ('15)461 → ('16)282 → ('17)290 → ('18)321 → ('19)223

□ 향후 추진계획

○ 건설산업 선진화, 해외·신기술 시장 개척으로 경제활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규제개혁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유망 중소건설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인 건설산업 성장을 지원하며,

-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금융·신기술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속 확대·발굴하고, G2G 협력강화를 통해 수주지원 시너지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 아울러, 스마트건설 R&D를 본격 시행하고,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여 스마트건설의 산업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 임금체불 근절, 적정임금제 전면도입 등 임금보장을 강화하고, 여성·고령자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전자카드제 확대,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통해 생애주기 경력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하도급 업체의 간접비를 보장하고, 건설 분야 공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고용평가제 등 건설산업의 공공성 평가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현장과 인프라 관리의 '안전 최우선 원칙' 실현하겠습니다.
 - 건설현장의 특성을 토대로 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기준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노후 기반시설의 예방적·체계적 관리, 지하안전영향 평가 개선, 기계설비 안전 성능 확보 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성과지표 개요

〈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

- 개념 : 수송, 보관 및 창고, 하역, 포장, 물류정보와 일반관리 등 물류서비스 활동에 따른 물류활동의 부가가치(value-added)와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여 물류활동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정도 파악
-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조사대상 : 물류 수송, 보관 및 창고, 하역, 포장, 물류정보 등 국가물류비용
- 조사방법 : 국토교통통계연보(국토교통부), 운수업조사보고서(통계청), 기업 경영분석(한국은행),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분석(한국교통연구원) 등 각종 자료 확인
- 측정산식 : $\text{물류활동 부가가치} / \text{국내총생산(GDP)} \times 100\%$

□ '19년 측정결과

- 2019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2022년에 산출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2016년 기준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국가물류 부가가치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3년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약 5월에 발표(2019년도에는 2016년도 실적 발표)

- 2016년도 물류활동 부가가치는 99,447십억원, 국내총생산(GDP)은 1,641,786십억원으로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6.06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국가물류 활동의 규모적 수준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가늠하는 척도로서,

* (최근 10년) '06년 6.91 → '07년 6.64 → '08년 7.20 → '09년 6.12 → '10년 6.47 → '11년 6.61 → '12년 6.33 → '13년 6.33 → '14년 6.75 → '15년 7.02 → '16년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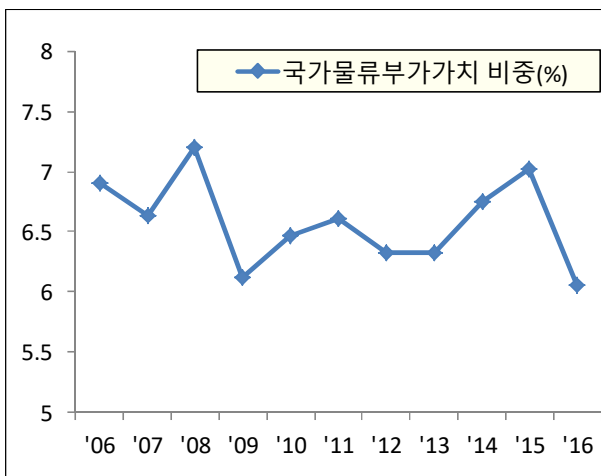
- 물류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성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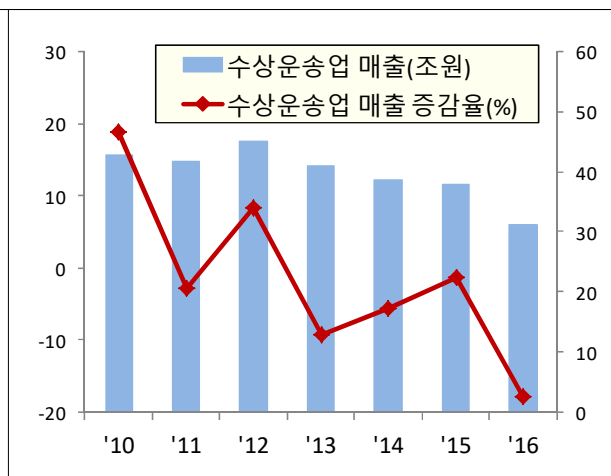
- '16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6.06%**로 전년대비 다소 하락하였고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이는 '16년 국적선사인 **한진해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상운송업의 매출이 전년대비 약 18% 급감한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동안 **물류활동 부가가치**는 정체 또는 감소함에 따라 국가물류부가가치가 낮게 산출되었습니다.

* 물류산업 매출액(조원, 통계청 운수업조사) : ('14) 88.9 → ('15) 89.4 → ('16) 86.5 → ('17) 85.8

<연도별 국가물류부가가치 비중>



<수상운송업 매출>



- 통계청이 집계한 '17년 물류산업 매출액도 전년 대비 감소한 만큼 '20년에 산정될 '17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만, '18년에는 수상운송업 매출이 6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전년대비 3.3% 증가), 전체적인 **물류산업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만큼 '18년 지표는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물류산업 매출액(통계청 물류산업통계) : ('17) 85.8조원 → ('18) 89.5조원
(단, 물류산업 통계산정 범위가 '18년부터 변경되어 직접 비교는 곤란)

○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고 물류활동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9년 6월에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동 혁신방안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생활물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수도권에 물류단지를 조성해 증가하는 물동량에 비해 부족한 **생활물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통 물류산업인 화물차운송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위수탁제도와 다단계 관행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질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개인업종 차량 톤급 규제 완화(1~5톤 → 1.5~16톤), 최소운송의무제 처분 기준 조정(이상 완료), 운송가맹사업 차량 허가대수 기준 완화(500대 → 50대) 등

- 아울러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물류산업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업」, 2,575억원, '21~'27, 예타중

○ 한편, 2018년 4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안전운임이 결정**(19.12.20 고시)되었습니다.

- 화물차운송산업은 연간 매출액이 36조원('18 통계청 운수업조사)에 이르는 국가물류산업의 큰 축이나, 과잉경쟁에 따른 저운임과 이로 인한 화주-운송사-화물차주 간 갈등이 불안요소로 지적되어왔습니다.
- 이번에 화주, 사업자, 차주간 협의를 거쳐 **안전운임이 확정**됨으로써 화물운송시장과 물류산업 전반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물류산업이 발전**하고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지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추진계획

- '24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지표('21년 기준)를 7%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물류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원활한 물류를 위해 필요한 수도권에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도심 유희부지(철도차량기지)를 활용해 공동물류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 2월 추진방안 발표(수도권 물류단지 3개소, 소형 공동물류거점 3개소)
- 아울러 첨단 물류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물류신기술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배달대행 등 새로운 물류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물류분야 새싹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설명회·투자협의회를 통해 모태펀드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홍보·판로개척,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우리 물류기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중국과의 복합일관수송 시범사업* 등 동북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우리 물류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 * 韓인천-中웨이하이 : 차량교체·하역없이 화물을 트럭에 실은 상태로 배에 선적·운송
 -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투자타당성 조사 지원, 정책금융 지원 강화,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진출기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